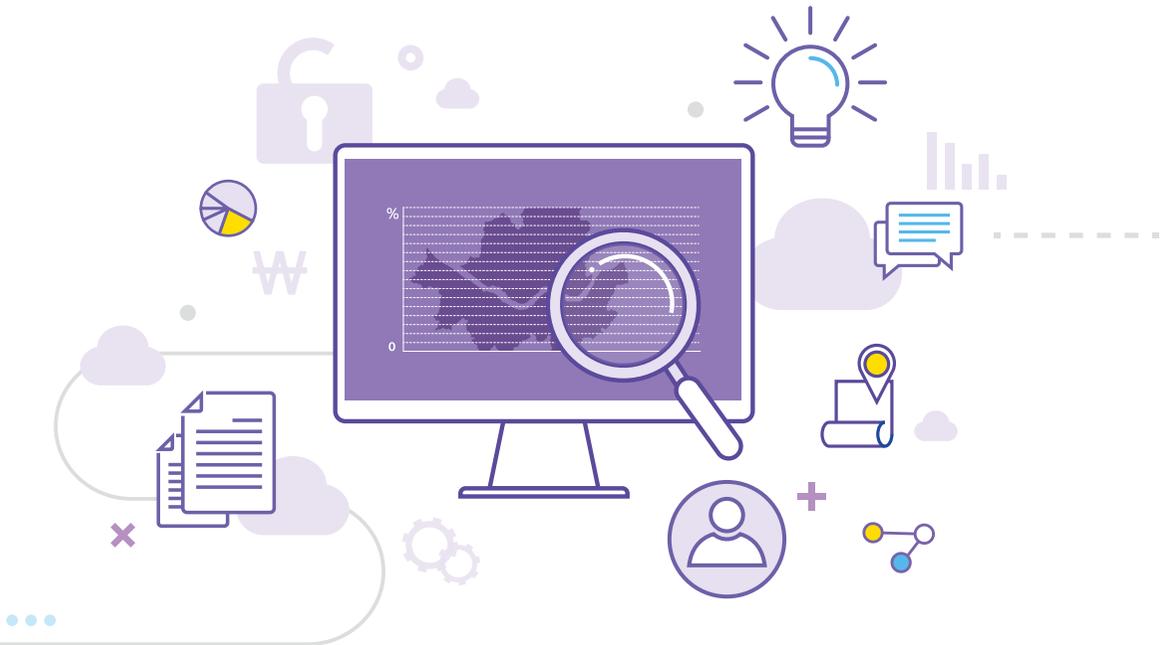


2017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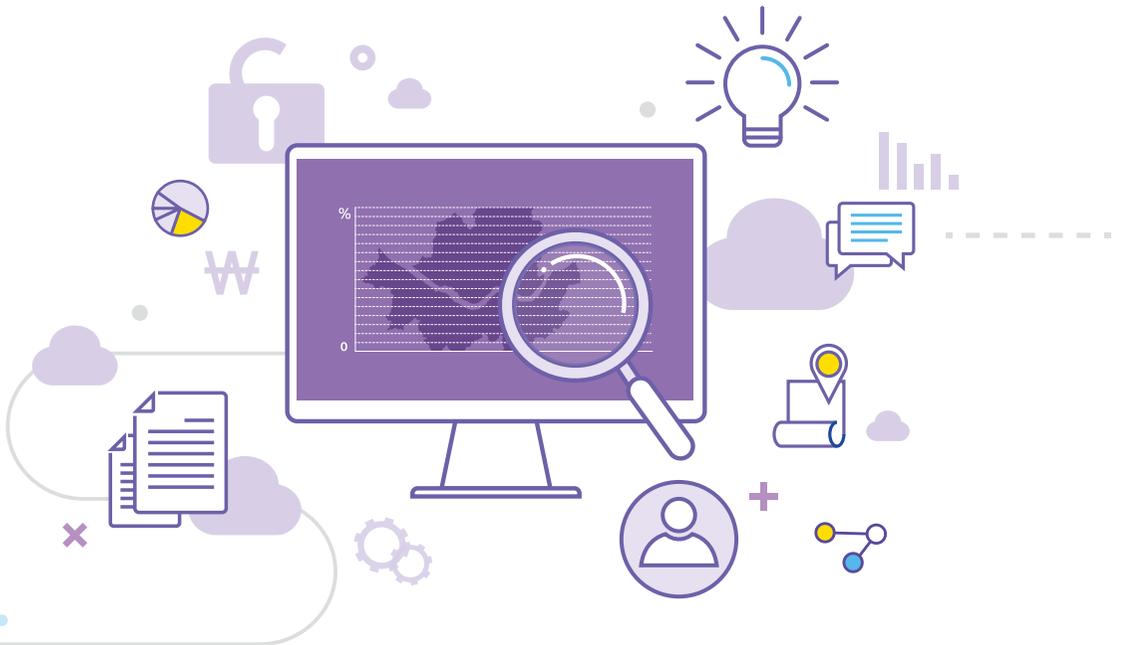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



2017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 서울시 정보공개가 앞장섭니다



열린시정2.0 공약, TFT운영

- 2011.10 열린시정 2.0 공약
- 2011.11~ 전문가 자문회의 총11회,
- 2012.5 연인원 128명 참석
- 2012.2~3 열린시정 2.0 TFT 운영
- 2012.2 정보공개, 조직문화 개선 전직원 교육
- 2012.3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
- 2012.3 정례간부회의 생방송 공개
- 2012.5 열린데이터광장 시범 오픈

열린시정2.0 정책선언, 사전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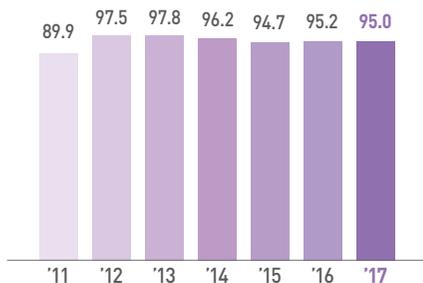
- 2012.3~8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개선
- 2012.8 열린시정 2.0 정책선언
- 2012.8 정보소통광장 시범서비스
- 2012.9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완성 및 시행
- 2012.9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 2012.10 서울기록문화관 개설
- 2012.12 사전공표 64종 공개

정보소통광장 오픈

- 2013.8 사전공표 목록 확대(327종)
- 2013.10 정보소통광장 정식 오픈
- 2013.10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 2013.10 서울기록원 건립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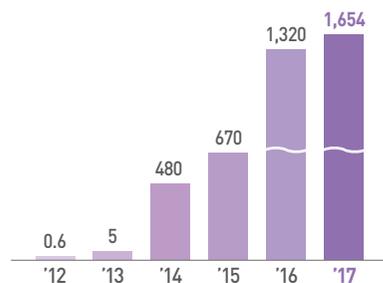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단위 : %)



정보소통광장 공개정보

(단위 : 만건)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열린시정 완성

2014.01 - 12

열린시정 공유확산

2015 - 현재

원문공개, 정책실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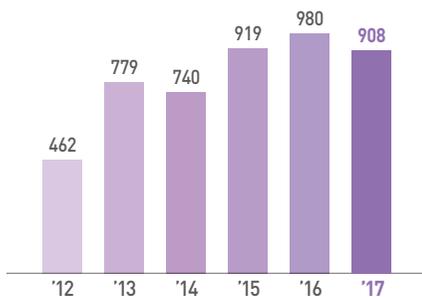
- 2014.3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 2014.3 기록 분류체계 정비 완료
- 2014.10 5개 자치구 결재문서 공개, 정책실명제, 회의정보 자동 공개
- 2014.10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오픈
- 2014.11 자치구 정보공개사업 평가
- 2014.12 정보공개 시민만족도 실시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25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공개

- 2015.3 자치구 결재문서 전면확대(5개→25개) 건설사업정보 및 관련문서 공개, 내손안에서올 연계
- 2015.10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공개, 정책연구자료 및 주민참여사업 통합 서비스
- 2015.10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오픈
- 2016.4 서울기록원 착공
- 2016.9 사전공표 목록 확대(353종)
- 2017.10 사전공표 목록 확대(379종)
- 2017.10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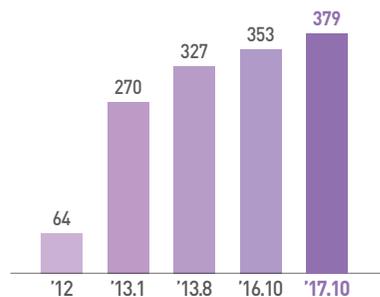
주요회의, 회의록 공개

(단위 : 건)



사전공표 항목

(단위 : 종)



1 2017 서울시 정보공개 현황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제도	8
서울시 소통·참여·협력의 발자취	10
서울시 정보공개 주요 추진사업 성과	27

2 한 눈에 보는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정보소통광장 내부 월별 검색 키워드	42
외부 포털유입 월별 검색 키워드	44
정보소통광장 인기 콘텐츠 Top 20	46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베스트 콘텐츠 Top 20	48

3 숫자로 보는 2017 서울시 정보공개

2017년 정보공개 어떻게 했을까?	52
분야별, 기관별로 비교해보면?	55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57
시민 관심정보, 얼마나 공개되었나?	58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4 서울시 정보공개 평가와 분석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62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65

5 전문가, 시민이 본 서울시 정보공개

응답하라 1998! - 서울시의 정보공개 오디세이아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8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정책 윤여진 (사)언론인권센터 이사	74
'질문·답변' 많은 서울로 발전하길 이원율 헤럴드경제 기자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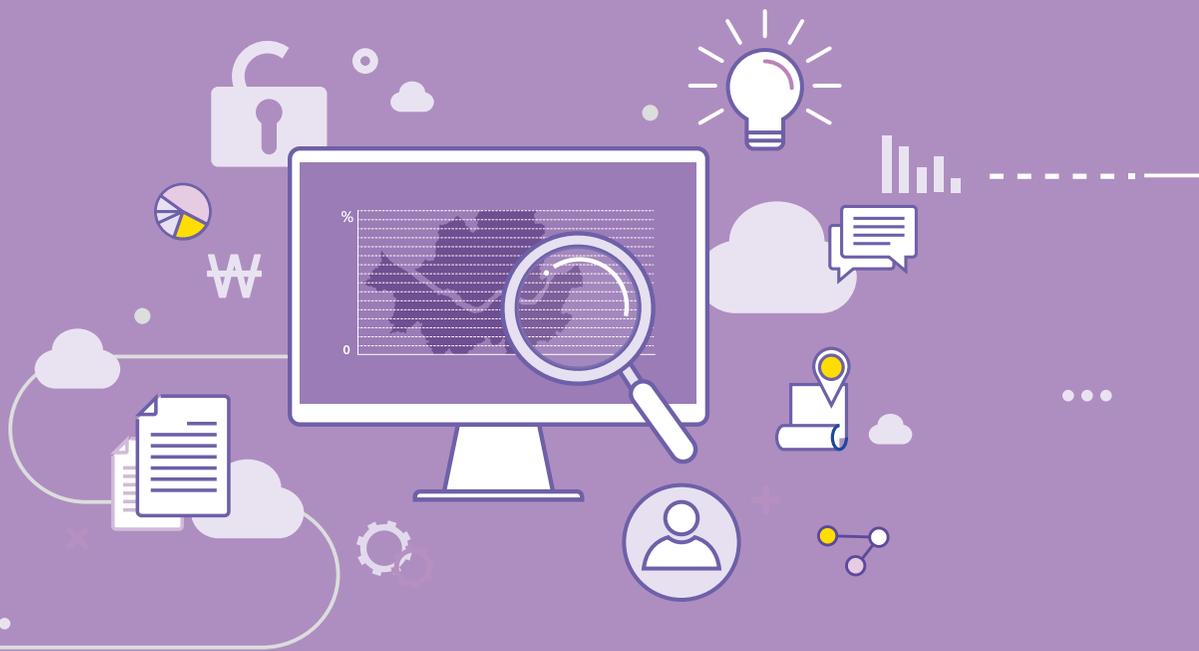
6 통계로 본 정보공개 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82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105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12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13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138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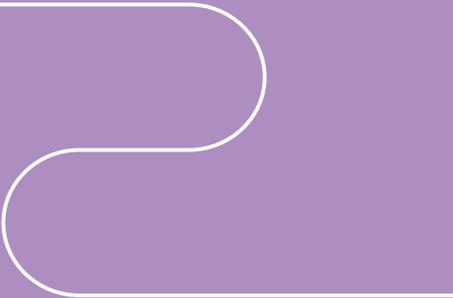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1.

2017 서울시 정보공개 현황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제도
서울시 소통·참여·협력의 발자취
서울시 정보공개 주요 추진사업 성과



서울시 정보공개
시민의 소통과 참여로
더 좋아집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에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2004년 전부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 범주를 축소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0년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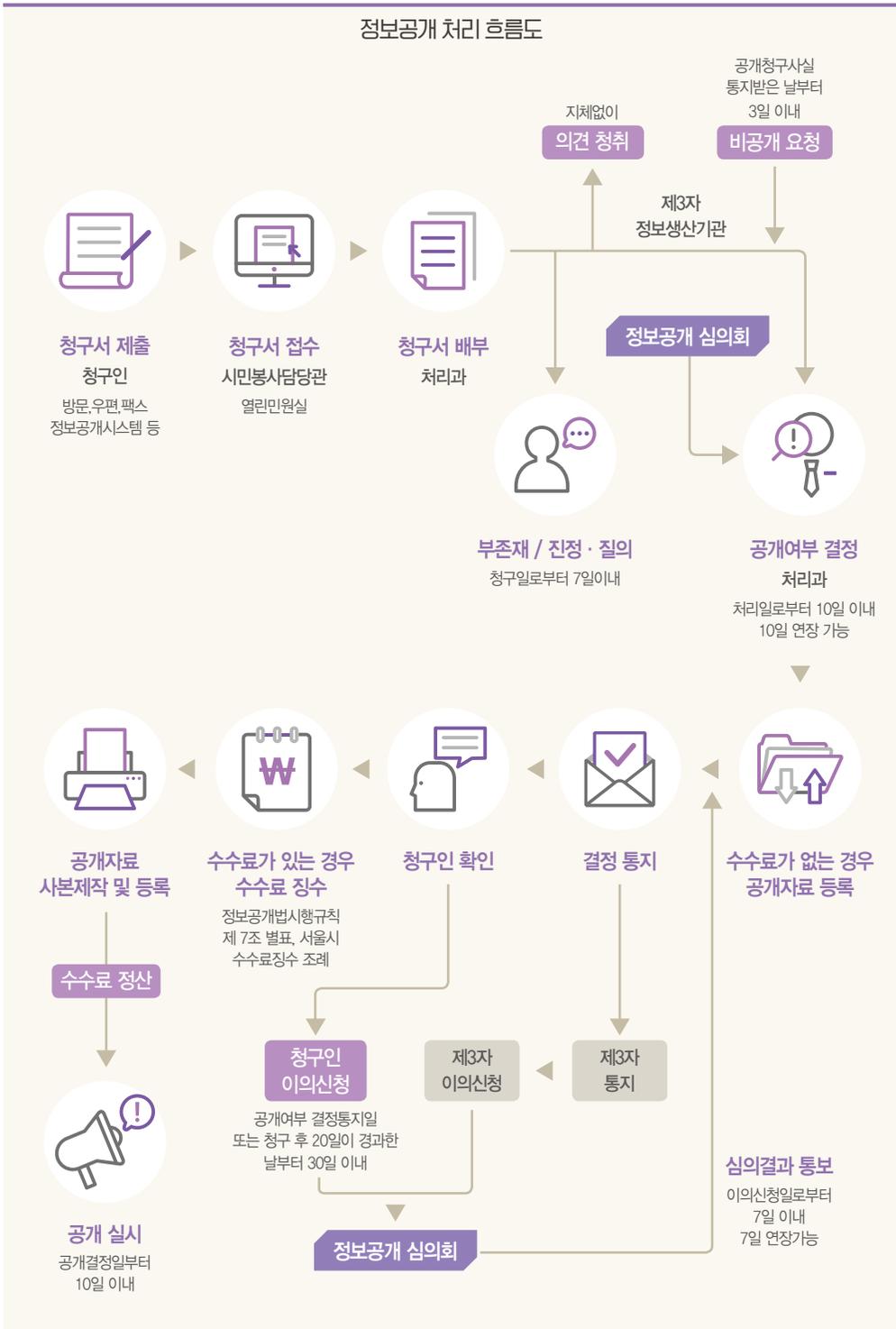
-
-  **청구인** 모든 국민(법인 및 단체 포함)이 가능하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능

 -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보조를 받는 기관(시행령 제2조)

 -  **청구방법**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여 각 기관별 해당 행정정보 담당부서로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열린시정 준비 2011.10~2012.5

소통, 참여, 협력으로 만드는 ‘열린시정 2.0’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소통, 참여, 협력’의 시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열린시정 2.0’을 제시하면서 세계 최고의 투명한 시정을 만들기 위한 기반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행정정보의 주인인 시민이 모든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시민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시민 정보주권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열린시정 2.0’을 통해 서울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열린시정 2.0’ 추진에 앞서 시민에게 5가지 약속을 천명했다. ‘행정정보 시민 공유’, ‘열린시정의 사각지대 제거’, ‘공공데이터 개방’, ‘서울의 기록정보 소통체계 혁신’,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열린시정 2.0’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약속을 통해 시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각종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열람하며 주요 정책 수립 과정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정보보호와 공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의 섬세함, 책임감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민에 대한 인식도 변화된다. 시민은 그저 정책의 대상이자 수혜자만이 아닌 행정의 협업자이면서 동반자가 되기 때문이다.

열린시정 2.0 5가지 약속이 실현된다면?



시민

- 행정정보는 공무원이 독점
- 시민은 청구하여 공개한 정보 획득
-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알 수 없음
- 공공서비스의 수동적 수요자에 국한

- 행정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
- 시민은 공유된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
- 시민은 각종 보고서, 회의록 등을 통해 중요 정책 수립 과정을 인지하고 적극 참여
-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유



공무원

- 공개에 대한 고려 없이 정보보호에만 중점
- 행정의 준법성에 중점
- 시민은 행정의 수요자, 감시자

- 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동시에 고려
- 행정의 섬세함, 책임성, 투명성 대폭 강화
- 시민은 행정의 협업자,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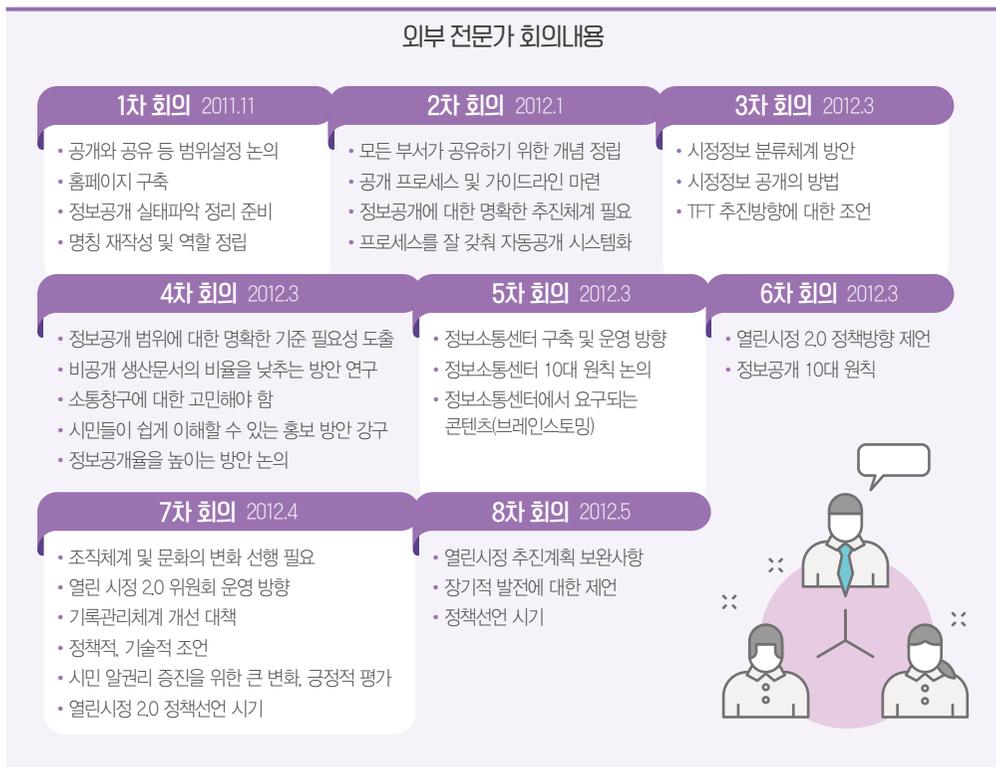
‘열린시정 2.0’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약 7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의견충돌과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었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열린시정 정책과 과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열린 시정의 원칙을 함께 도출하였다.

준비과정

‘열린시정 2.0’을 위한 준비과정은 크게 ①전문가 회의 ②TFT운영 ③정보공개 문화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열린시정 2.0’ 정책방안과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회의

2011년 11월 ‘열린시정 2.0’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회의는 총 11회 열렸다. 연간 128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보공개와 공유 등 범위설정을 논의했으며, 시정 분류 체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방안과 소통 창구에 대해 조언을 받기도 했다.



② 서울의 정보가 모두 흘러드는 곳, 정보소통광장 TFT 운영

‘열린시정 2.0’의 핵심 사업인 정보소통센터 구축을 위해 2012년 2월 1일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담 TFT가 설치됐다. TFT는 우선 5년 간 서울시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서울시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정보소통센터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념 정의와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정보소통광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결정했으며, 시민의 정보소통 창구이자 서울시의 모든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행정문서의 주인인 서울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의 상징이 된 것이다. 더불어 정보소통광장은 방어적인 ‘최소한의 공개’에서 사전공표와 개방, 즉 ‘최대한의 공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담당자나 부서 중심의 개별적 접근에서 자동 공개로, 여러 채널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오던 것을 정보소통광장이 라는 하나의 창구로 전환한 시스템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③ 정보공개 문화조성 인식개선

열린시정 2.0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생산 관리자인 공무원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젖어 있는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힘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2012년 2월부터 2개월에 걸쳐 54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필요성’, ‘언론에서 바라보는 서울시 정보공개 형태’, ‘국내외 정보공개 사례’, ‘정보공개 유용성’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정보공개 매뉴얼’도 배포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인식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직원 인식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대한의 공개를 위한 제도도 정비하고 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부적정한 비공개 정보의 제로화를 추진했다. 기존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심의를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직권심의를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책임관과 분임책임관에게는 소속 직원 교육과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자체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열린시정 2.0을 위한 새로운 도전

‘열린시정 2.0’이 구체화 되면서 정보공개를 위한 시도 역시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2년 3월에는 100여 개의 각종 회의와 위원회 회의록이 전면 공개됐다. ‘심의·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기록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행을 깨는 시도였기에 의미가 컸다. ‘정례 간부회의 생중계’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개설’ 등의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졌다.

① 정례 간부회의 생중계

생생한 회의 전달로 시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참여도 함께 높아져

2012년 3월 19일 시장단 및 실국본부장 60명이 참석하는 정례 간부회의 생중계를 시작으로 각종 회의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생중계 대상 회의는 ‘정례 간부회의’,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였다.

서울시는 인터넷 TV 등을 통해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회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방송 형태는 회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동영상, 회의록 등 채널을 달리하여 맞춤형으로 공개했다. 특히 정책 내용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개발단계에 있는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 간담회는 녹화 동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②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개설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데이터를 만나보세요

서울시는 2012년 5월 21일 공공데이터 개방 단일 창구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 data.seoul.go.kr](http://data.seoul.go.kr))’을 시범 오픈했다. 우선 ‘교통, 환경, 도시관리, 보건, 주택’ 등 40종 918개의 내부 행정 원문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2014년까지 원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57종 1,200여 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서울시와 관련된 생활 속 공공 데이터를 ‘개방형 데이터제공 방식(Open API 방식), 지도, 수치 데이터’ 등 데이터셋(DATASET)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하기 어려운 유동 인구, 공간정보, 교통 등의 공공 원문 데이터(Rawdata)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서울시는 공공데이터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

해 시민에게 공개했지만 대부분 가공된 데이터로 조회만 가능해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데이터는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공공DB 원문으로서 시민이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가입도 어렵지 않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과 약관 동의, 인증키 발급을 거치면 된다.



정보소통광장, 서울시 투명성을 높인다

정보소통광장 시범사업 개시

정보소통광장은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콘텐츠 중심의 웹사이트이다. 서울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2013년 10월까지 '정보소통광장(당시 도메인: gov20.seoul.go.kr)'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 6,100여 건의 정보가 우선 공개됐는데, 그 내용은 크게 '행정정보 공표(사전공표)', '정책실명제', '서울시 백서', '사회적 관심사업', 그리고 '회의 공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정보소통광장 시범서비스 기간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문서의 양
행정정보 공표	정기공표	2,666
	수시공표	377
정책실명제		652
행정자료실		188
서울시백서		37
사회적 관심사업		1,035
회의록	주요회의	30
	위원회회의	1,132
합계		6,117

① 행정정보 공표(사전공표)

시민이 청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합니다

행정정보 공표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미리미리 알아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비스이다. 분류체계를 시민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복지, 여성가족, 경제, 안전 등 12개 분야로 분류했다. 정보공개 종류도 2012년 12월 64종에서 2013년 1월 270종, 2013년 8월 327종, 2016년 10월 354종, 2017년 10월 379종으로 늘어났다.

② 정책실명제

투명성을 높여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실명제는 말 그대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주체를 공개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시정운영 주요핵심과제 사업, 주요 국제교류와 통상에 관한 사업'이다.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도 정책실명제가 추진됐다. 2010년까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까닭에 '부조리와 특혜,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반목으로 인한 사회적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전후 집행 과정을 기록해 공개했다.

③ 서울시 백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백서를 일목요연하게 파일로 제공

서울시 백서는 주요 사업 및 행사의 추진과정과 성과,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의 해결과정 등을 기록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로서 발간이 완료된 백서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시범서비스가 종료된 2013년 10월 말까지 37가지의 백서를 서비스화 했으며, 각 부서별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백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개한 것에 의의가 있다.

④ 사회적 관심 사업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정보공개

서울시는 2012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파이시티 사업, 파인트리 사업, 서해벚길 사업, 세빛둥둥섬 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우면산 산사태 대책수립, 지하철9호선(1단계) 건설'

7대 사업의 정보를 전면 공개했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등은 제외했다. 당시 공개규모는 결재·보고 문서를 중심으로 총 1천 90개 문서였다. 사업의 선정·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비정형문서 문서 수만 1천여 개였고 페이지 수도 1만 2천여 쪽에 달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내부 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비공개가 관행이었기 때문에 7대 사업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특히 7대 사업이 언론의 비판과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개가 쉽지 않은 민감한 사업이었다. 7대 사업 정보 공개는 단순히 보여주는 식 정보 공개가 아니라 투명한 시정의 운영을 실천하겠다는 진정성을 입증했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⑤ 회의공개

천만 시민이 지켜보고 함께 투명한 행정을 만듭니다

회의공개서비스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주요 공식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기·비정기 회의 영상과 회의록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회의 일정을 미리 정보소통광장에 게재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회의록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 회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안건과 일정 등을 사전 공지했다. 회의 개최 후 회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등은 위원의 개별 의견으로 시의 최종 의견이 아니라는 점도 공지했다.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도 있었다. 관련 법령 등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적정성을 검토 받은 경우에만 비공개로 결정됐다. 그 결과 교육지원심의회 등 86개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 위원회 회의는 열람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됐다.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시는 정보공개 양이 많아지면서 ‘공개’와 ‘비공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정보 전면 공개를 위한 혁신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연구조사를 통해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의 공개여부 결정 실태를 확인하고, 5년간 비공개 처리 현황과 그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국내외 정보공개 사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방침을 구체화했다.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제시해 보다 더 많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은 정보공개제도 일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참고자료 등 총 4장, 22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정보공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의 전반적인 사항부터 실제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과 처리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해 담았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열린시정 준비

서울시는 열린시정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과 ‘열린시정 2.0 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정보공개정책과 신설에 따른 업무기능을 설계하고, 서울기록원 건립 계획 작성, 기록정보소통 혁신을 위한 로드맵과 종합실천계획 수립, 서울정보소통센터 업무기능·조직 설계 등의 업무도 담당했다.

열린시정 2.0 자문위원회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는 열린시정 2.0 자문위원회에서 공공정보 개방, 활용정책, 정보소통광장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열린시정 2.0 추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정’, ‘열린시정 2.0 정책 선언 발표 참여’, ‘정보공개 현황 점검 및 정보소통광장 운영’,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매분기 회의 개최가 원칙이었으며,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됐다.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소집이나 해당 분과위원간 협의로 수시 개최됐다.

서울기록문화관

서울시는 옛 청사였던 서울도서관 3층에 서울시 기록의 변천사와 서울의 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서울기록문화관'을 설치하여 2012년 10월 26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정의 주요 정보를 비롯하여 역대 시장 결재문서, 보고서 등 주요 기록물 5만4천여 건의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열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옛 시장실 견학, 전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서울기록문화관을 전면적으로 개편, 서울광장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시민의 기록을 수집하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운영개요

위 치	서울도서관 3층 내 약 290m ² (12,10,26 개관) 서울광장 상징공간(220m ² ,약 67평) +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70m ² ,약 21평)
전시내용	서울광장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 공간 조성 대한제국 시대부터 2014년까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 및 광장의 변천사를 담은 다양한 기록물 전시[15.10.13 재개편]
운영	화~일 09:00~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인력 : 5명/1일(직원1, 자원봉사자4)

■ 운영실적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방문자수	20,619	94,159	115,141	90,020	86,267	89,316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	-	5,262	28,555	25,203	23,054
총 개관일수	55	300	298	295	300	292
1일 평균 방문자수	374	313	386	305	286	305

■ 전시내용

구분	전시주제	전시사진
서울광장 상징공간	<p>서울광장 특별한 시간여행</p> <p>대한제국~2014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연대기 연출</p>	
	<p>서울광장의 히로애락</p> <p>인물 중심으로 본 다채로운 서울광장의 모습 연출</p>	
	<p>시민기록 수집창구</p> <p>서울광장 관련 시민 기록 수집 상시 창구 운영</p>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p>[제1공간] 기억하겠습니다 : 기억, 추모, 참여공간의 연출 재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광장 분향소 방문시민(35만여 명)들이 만든 노란리본, 종이배, 추모글 선별 전시 • 추모공간 외벽에 방문시민들의 추모메시지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구성 및 연출 	
	<p>[제2공간] 잊지않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교훈을 되새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참사 이후 4년간의 시민 기록 콘텐츠를 벽면에 연출 •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시민에 의해 제작된 추모영상 연출 	

투명하게 시정을 속속들이 살펴보다

서울시 누드 프로젝트

서울시는 2012년 12월 세빛둥둥섬, 서해벚길, 파이시티, 지하철 9호선 등 논란이 컸던 서울시의 7개 사업의 문서 1,090건(1만2,000쪽)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녹취록 등의 민감 내용도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패와 부조리는 비공개와 비밀주의의 온상에서 자란다.”며 ‘누드 프로젝트’로 이름붙인 기록의 공개였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누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누드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모든 시정 정보를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책임성 확보’ 3개의 핵심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공개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이 설계한 ‘정보공개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업무, 기록 관리에 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다.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정보공개정책과가 만들어진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열린시정에 대한 의지라고도 볼 수 있다.

정보공개정책과의 신설로 이제까지 시도됐던 정보공개 정책과 시스템은 더 가다듬어지고 체계화 됐다. 정보소통광장 포털도 시범 서비스를 종료하고 2013년 10월 28일 정식 오픈했다. 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문서공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행정문서 공개가 확대됐다. 뒤이어 정보공개율도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보소통광장 기능 보완 및 확대

정보소통광장은 2012년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시의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던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주요회의, 7대 사회적 이슈사업 등을 모아 제공하는 통합안내 사이트 수준임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2012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보소통광장 이용현황을 보면 접속건수는 37,688건에서 172,230건으로, 하루 평균 접속 건수는 471건에서 2,153건으로 약 4.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어떤 콘텐츠가 더 필요한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 사용자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춰 조언을 들었다. 그 결과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와 함께 총 5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정보소통광장 구축을 완료했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인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2차로 나누어 시행됐다. 1차 서비스는 2013년 10월 28일을 기점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본을 공개했다. 2차 서비스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문서 공개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전면 확대됐다. 단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적용한 것은 시행착오 및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이자 국내 최초의 시도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보소통광장 구축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계시스템이 무척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에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위험 발생을 최소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3년 10월 28일 정보소통광장은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었다.

문서공개시스템 구축과 행정정보공개 확대

서울시는 생산단계의 기록물인 결재문서를 ‘어떻게 공개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특히 자동 공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관리와 공개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문제였다. 서울시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혁신이 필요했기에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고 여러 시도와 노력 끝에 문서공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28일 정보소통광장 오픈과 함께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 문서 5만 건과,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약 300건의 전자결재문서를 공개했다. 문서 공개시스템은 문서생산영역 시스템에서 문서가 결재되면 정보공개영역인 정보소통광장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동화 정보공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의 특징은 분야별 정보가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자동수집이 되어 업무분야에 따라 16개 분야로 정리되어 제공된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PDF나 원문파일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PDF뷰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뷰어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범 서비스에서는 임의적 가공 정보만을 시민들이 볼 수 있었다면 정보 자동화시스템 도입부터는 금방 결재된 따끈하고 생생한 정보를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프로세스의 장점이다.

정보공개 자동화시스템 도입과 함께 2013년 10월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를 통해 정보소통광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5만 6천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4년 3월에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가 이루어져 공개되는 문서 수만 680만 건이었다. 이로써 행정정보 공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되는 결재문서는 1,619만여 건 이상에 이르며, 하루 2만여 건의 결재문서가 공개되고 있다. 정보소통광장 방문객 수도 2013년 10월 오픈한 이후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127만 명, 일평균 7천여 명 방문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정보소통광장 통계

[이용현황] 총 11,276,828명, 일평균 7,390명 방문('13.10.28 ~ '17.12.31)

방문수	1일 평균 방문수	열람 페이지	1인당 열람 페이지	평균 이용시간
11,276,828	7,390	55,670,600	4.9	2분 25초

※ 2017.12월 한 달간 일평균 방문자수 : 8,444명

[행정정보 전면 공개] 총 16,544,230건('13.10.28 ~ '17.12.31.)

(단위: 건)

결재문서	재정정보	연구자료	120 주요질문	통계자료	기록물 등
16,193,772 (자치구, 투출기관, 첨부문서 포함)	14,014	8,238	3,971	1,366	322,869

※ 기록물 등 : 기록물, 회의록, 보도자료,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등 약 32만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총 316,559건('13.10.28 ~ '17.12.31, 본청기준)

(단위: 건)

구분	공개			비공개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국장급 이상	221,947(70.1%)	149,311(47.2%)	72,636(22.9%)	94,612(29.9%)

[과장급 결재문서 공개] 총 12,350,905건('13.10.28 ~ '17.12.31, 본청기준)

(단위: 건)

구분	공개			비공개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과장급	9,943,578(80.5%)	5,941,854(48.1%)	4,001,724(32.4%)	2,407,327(19.5%)

※ 전체 문서 공개율(80.3%) : 국장급 이상(70.1%), 과장급(80.5%)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도 64종(2012년)에서 379종(2017년)으로 확대됐다.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출연기관 공통항목과 서울시 실국별 공표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목록화했다. 시민생활 관련정보, 행정 감시 관련정보, 자치구 통합지표 등을 신설해 정보소통광장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였다.

■ 행정공표 목록 확대

'12년	'13.1월	'13.8월	'16.10월	'17.10월
64종	270종 444개 업무	327종 492개 업무	354종 511개 업무	379종 538개 업무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 직원교육,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 공개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2010년 88.6%에서 2017년 95.0%로 급격히 증가했다. 정보공개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교육도 계속됐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워크숍, 세미나, 웹툰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록해야 기억한다, 세월호 기억공간 '별이 되다'

서울시 기록의 변천사와 서울의 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서울기록문화관 내에 세월호 기억공간도 조성됐다. 2014년 4월 16일,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만은 놓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서로를 보듬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로부터 7개월 간 시민들은 많은 기록과 메시지, 그리고 마음을 남겼다. 서울시는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었던 304명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기록들을 소중히 모았고, 분향소를 철거하면서 2014년 11월 21일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 약 70㎡의 면적에 시민 추모공간인 '별이 되다'를 조성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기억을 구체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는 '별이 되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별이 되다'는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일요일 09:00~18:00이다.

TIP

서울시는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며 분향소를 운영했던 위치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사회적인 약속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의지를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로 표현한 것이다. 표지석 디자인은 '추모의 마음, 기억의 노력'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검은색 대리석에는 참사에서 분향소 운영까지의 기록을, 황색 동판에는 세월호 상징 이미지인 배를 그려 넣었다.

서울시 아카이브, 서울기록원

서울시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아카이브인 서울기록원을 '16. 4. 20. 착공하였으며 '18년 12월 준공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도, 본관, 서소문 별관 등 3곳에 기록관 문서고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기록원은 단순히 보관의 의미를 넘어 기록물 지식 자원화라는 패러다임에 발맞춰 서울의 기록을 수집·보존·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특징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관리시스템이 달라진다. 디지털환경에 조응하여 서울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네트워킹하고 디지털 기록정보를 관리·서비스할 수 있는 선진적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전문 보존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보존에 특화된 전문장비를 도입하여 기록물 관리체계의 전문화를 확보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세 번째는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서울기록, 즉 시정기록의 이관·인수·보존·활용과 다양한 유형의 시민기록에 대한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전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기록을 콘텐츠화 하고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기록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8개 건립대상 부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를 최종 건립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설계현상공모, 201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6년 시공사 선정 및 기공식 행사 추진과 함께 서울기록원 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기록원의 조직은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되었고 2018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위치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규모

연면적 15,004㎡(지상5층, 지하2층)
 ※ 문서, 시청각, 행정박물관 등 총 100만점 보존

공사기간

'16. 4. 20 ~ '18. 12

총투자비

498억 원(시설비425,감리·부대비31, 장비비42)

건물콘셉트

시간의 흐름 속에
 흠이 쌓이듯 기록이 쌓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건물 입면에 반영



서울기록원 조감도



건립공사 현장('18년 9월)

시민의 자산인 행정정보의 완전한 개방 · 공유 · 소통 추진

행정정보 전면공개 시행

서울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정보의 완전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첫째, 행정정보 자동 공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했다. 결재문서 등 행정정보가 생산되면 다음 날 자동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수집 ·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



둘째,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시민, 언론,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정보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내부 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을 실행했다.

넷째, 행정정보 완전공개를 위한 누드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공개하며 그 외에 재정, 예산, 회의, 용역결과, 통계, 공공데이터, 사전공표 행정정보 등 공개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단순검색에서 맞춤형 추천으로 진화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능 보안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내부 행정시스템의 공개서비스를 확대하여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다른 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치구 결재문서까지 공개서비스를 시행했다.

정보소통광장은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개별 건(item) 단위의 서비스를 지양하고 정책에 대한 총체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관심 키워드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보다 쉽게 갈무리하거나 메일링으로 받아보고, 이슈 모아보기 등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서비스로 진화했다. 시정연구자의 정보요청 온라인 창구를 단일화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SNS로 연계하는 한편 모바일 최적화, 검색기능 단순화로 모바일 엄지족의 편리성을 강화했다.

① 맥락 서비스

‘관련있는 문서’ 서비스는 기능분류체계(BRM)를 활용하여 건(item) 단위보다 상위 계층인 첼(file) 단위에서 관련된 문서를 제공한다. 기능분류체계를 통하여 기록 정보를 조직화함으로써, 시민이 관련된 맥락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능분류체계가 없는 콘텐츠의 경우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맥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용/참조문서’ 서비스는 최신 기술인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 속의 문서번호를 식별하고, 상호 인용하거나 참조한 문서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용/피인용 관계에 의



한 맥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근거가 되는 기록을 파악하거나 실행 결과 및 평가에 대한 문서를 열람하면서 해당 정책의 입안, 계획 단계의 문서도 함께 볼 수 있다.

② 맞춤형 서비스



정보소통광장은 관심분야의 최신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시했다. 정보소통광장에 로그인해 관심 키워드를 미리 입력 또는 체크해두면, 관련된 최신 행정 정보가 빠짐 없이 정보소통광장 마이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갈무리되고, 매주 한 번씩 이메일로 전송된다. 키워드 설정이 어렵거나 모호하게 느껴져도 걱정 없다. 시민들을 위해 분야별, 생애주기별로 키워드를 추천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해서 적절한 키워드를 간편하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다. 정보소통광장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면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수동적 서비스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③ 이슈 모아보기(큐레이션 서비스)

정보소통광장에서는 정보 과잉시대에 사용자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해줄 수 있도록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슈 모아보기’ 코너에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서울시 행정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를 한 화면에서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주로 시정 핵심 사업을 소개하는 기자설명회에서 다뤄진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결재문서, 예산설명서, 통계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가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이슈에 대한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총체적 맥락으로 엮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4 시정연구지원서비스

시정연구지원서비스는 시의 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료수집, 설문조사, 관계 공무원 인터뷰 등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을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연구자가 유관부서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등 요청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소통광장에서 연구 목적, 필요사항 등을 기재해 연구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부서로 자동 접수돼 신청자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협의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된 내용은 추후 공개가능 여부를 판단해 정보소통광장에 오픈해 공유한다.



신청서 작성

시정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지원 신청서 작성



접수상담

연구자와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원 계획 수립



연구지원

자료수집 지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연구지원



지원내용공개

지원 사항 중 공개가능 사항을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⑤ 이달의 주요 공개정보

‘이달의 주요 공개정보’ 코너는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 이외에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가 결정된 자료 중에서 선별해 공유하는 서비스다. ‘미세먼지’, ‘따릉이’ 등 개별 청구빈도가 높거나, 시민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정보 열람은 물론 첨부파일 이용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가치 있는 개별 요청자료를 선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자료가 필요한 시민이 자료를 재요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서울시 역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2017년 이달의 주요 공개정보

연번	제 목
1	서울시 사물인터넷(IoT) 추진 계획
2	서울시 청년수당 · 보장 연구 발표 토론회 결과
3	서울시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4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및 황사 대응 매뉴얼
5	서울시 금연 현황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만족도 관련 설문항목 및 결과
7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및 관계법령
8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자료
9	2017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1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11	세운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방지 상생협약

⑥ 모바일 최적화 서비스

그동안 PC 중심으로 기획 · 설계됐던 사이트를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모바일에 최적화시켰다. 특히, 정보소통광장의 핵심인 검색기능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대폭 개선했는데, 현재 메뉴/공개여부/결재자 직급 등 세분화 되어 있는 검색필터를 4개 항목(▲분야/메뉴 ▲기간 ▲파일유형 ▲상세옵션)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탭으로 처리해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기능들은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정보와 총체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⑦ 해시태그 시범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해시태그(#키워드)'를 정보소통광장 자료에도 적용해 소셜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책문서를 검색해 문서에 달린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동일한 해시태그가 걸린 정보소통광장 내 다른 자료는 물론 트위터 게시글도 함께 볼 수 있다.

해시태그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일종의 규칙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해시기호(#) 뒤에 특정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만 분류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다양한 시민의견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어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다.

⑧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정보공개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5대 개인정보(주민번호, 외국인번호, 휴대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필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특히 '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캔 이미지 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기술과 필터링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서비스통계

[서비스 콘텐츠 현황] 총 16,544,230건('17.12.31 기준) (단위: 건)

메뉴명	결재문서	회의정보	사전공표	시민관심정보 등
공개건수	16,080,918	6,160	56,298	400,854

※ 문서공개시스템 자동연계(16,390,643건) + 홈페이지 직접등록 등(153,587건)

[이용현황] 총 11,276,828명, 일평균 7,390명 방문('13.10.28~'17.12.31) (단위: 건)

방문수	1일 평균 방문수	열람 페이지	1인당 열람 페이지	평균 이용시간
11,276,828	7,390	55,670,600	4.9	2분 25초

※ 2017.12월 한 달간 일평균 방문자수 : 8,444명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조직문화 혁신교육 및 워크숍 추진

투명한 행정,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실무 직원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정보공개 이해' 사이버강좌를 '17년 7월 개설했다. 9월에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여 특강과 사례발표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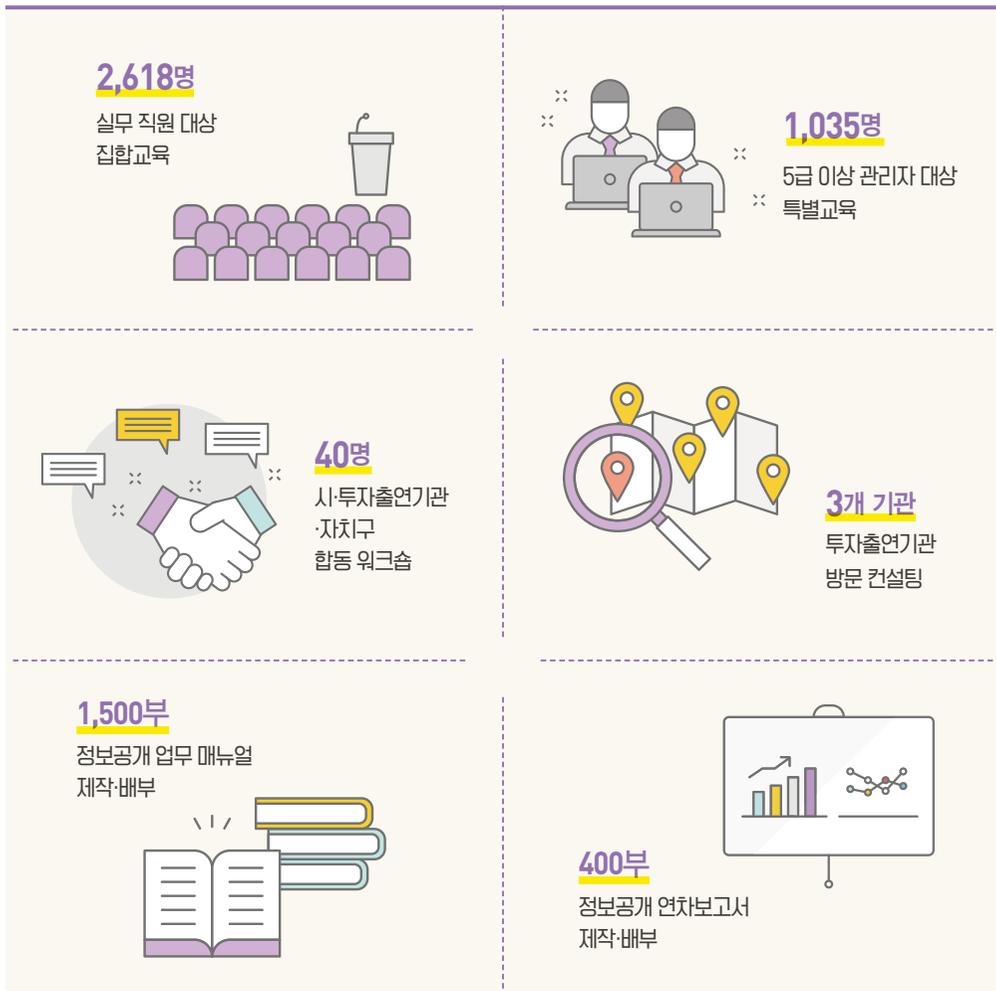


워크숍



정보공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17년 상·하반기 서울시 45개 실·본부·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을 평가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과 정보소통광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운영개요

설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위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명(제1,2심의회 각 7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 행정국장(제1,2심의회 겸임)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부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실적

구분	개최횟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	부존재 등 기타
계	50	50	-	185	121	58	6	40 (21.6%)	60 (32.4%)	72 (38.9%)	5 (2.7%)	8 (4.3%)
2017	18	18	-	60	47	11	2	20 (33.3%)	13 (21.7%)	25 (41.7%)	-	2 (3.3%)
2016	16	16	-	55	35	17	3	10 (18.2%)	18 (32.7%)	22 (40.0%)	2 (3.6%)	3 (5.5%)
2015	16	16	-	70	39	30	1	10 (14.3%)	29 (41.4%)	25 (35.7%)	3 (4.3%)	3 (4.3%)

2017년 정보공개심의회는 총 18회 개최, 6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 인용률은 2016년 50.9%에서 2017년 55.0%로 다소 증가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심의회 개최횟수 및 안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추진

'17년 공개 재분류 추진성과

1) 비공개 전자문서 재분류 결과

대상문서 92,932건 중 56,346건인 60.6%가 공개로 전환됨(부분공개 포함)

→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문서를 부분공개로 전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함. 비공개 제한부분이 많아 공개실효성이 적은 경우 부분공개로 분류

대상	재분류 결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92,932	6,602(7.1%)	49,746(53.5%)	36,584(39.4%)

재분류 결과 비공개 호수는 1호 및 6호가 많으며 전체 93.2%에 해당

비공개 호수	건수	비율	주요내용
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19,265	22.3%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 관련사항,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내용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320	0.4%	시스템 사용권한, 비밀기록, 국가안보 관련 정보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정보)	1,112	1.3%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문서, 손실 보상금 관련 문서 등
5호 (내부검토과정의 정보)	112	0.1%	회의록 등의 발언자명
6호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61,241	70.9%	소송이나 민원 문서의 개인정보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271	5.0%	법인의 내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송 등의 내용

공개 재분류 주요사례

- '17년 공개 재분류 대상은 금융자산 일괄압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의 민감도만으로 비공개를 설정한 사례가 다수임
- 또한, 일부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할 부분의 구분이 가능한 문서의 경우 비공개에서 부분공개로 전환하였음

2) DB구축문서 공개검토 결과

DB로 구축된 63,041건의 공개문서에 대한 재검토 결과 41,772건(66.3%)이 공개로 유지됨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 주요시설, 상하수도 관련 도면 등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대상	재분류 결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63,041	41,772(66.3%)	17,157(27.2%)	4,112(6.5%)

DB구축문서 재검토 결과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재개발 및 토지매매, 소송관련 문서가 다수를 차지함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록도 선별하여 재분류함
- 법 제35조에 따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소송정보, 보상액 정보 등 민감정보는 30년 경과된 기록도 비공개로 결정
- 개인의 재산권 등과 관련된 민감정보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적용

3) 기록관리시스템 재분류 결과 반영

시스템 탑재 : '17.10.23~10.24

기록관리시스템 반영내용

- 공개 재분류 결과 기록물 상세정보 및 비공개 호수 반영
- 공개 재분류 현황결과, 기록 이력정보, 감사추적정보 반영

서울기록원

한 사람의 일상이 쌓여 일생이 되듯, 순간순간의 기록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 우리는 후손을 위해 과거의 기록을 복원하고 현재의 기록을 관리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 서울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들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울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서, 사진, 영상, 행정박물 등 중요 시정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자체 기록원을 건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역사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는 아카이브의 기본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기록물 보존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체험 공간이 되는 데 초점을 두고 건축 설계를 진행했다.

먼저 지하1~2층은 서울시 보유 기록물 100만여 점이 영구관리되는 공간이다. 1910년대 초반 토지 관련 기록부터 2000년대 생산된 전자문서에 이르기까지 시의 역사를 증명하는 문서, 사진, 물건 등 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 간 생산될 기록물의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지상1층~3층은 시민참여 공간으로서 '스토리+공유아카이브+체험아카이브' 콘셉트로 설계했다. 시민들이 기록물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열람실과 자료실을 비롯해 보존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방형 서고, 기록보존관리 체험실, 세미나실, 방문자센터 등이 설치된다. 과학적 기록물 작업 공간은 4층에 배치했다. 훼손된 기록물을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하는 기록물 복원처리실을 비롯해 문서,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전자자기매체작업실, 시청각기록물 처리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기록원은 2015년 11월 건축설계를 마치고 2016년 4월 첫삽을 뜬 후 2019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서울 혁신파크 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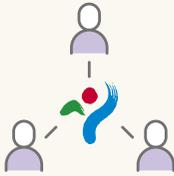
서울기록원 사업 추진 주요 목표



- 서울형 기록 수집 체계와 정리 분류 표준 체계를 정립해 생산, 폐기, 보존, 활용 등 기준 확립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상시 수집하는 시스템과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실물기록 및 전자기록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기록물 체계적 분류
- 특수기록물 별도 관리, 훼손기록물 복원, 디지털 보존 확대 등 유형별 기록 보존 체계 구축



-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중요기록을 수집하고 정책 연구 협력, 자원봉사 등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영역별 전문가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거버넌스 협력 체계 마련



- 서울의 시간적 축적과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화 전략 추진
- 전시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서울기록을 통한 시정 및 서울 연구 체계 지원



- 맞춤형 전시·견학 프로그램 운영,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 서울의 사회·역사·문화에 대한 학습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시민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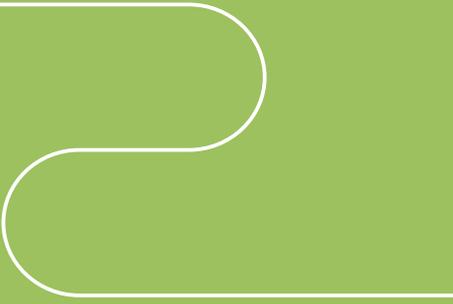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정보소통광장 내부 월별 검색 키워드

외부 포털유입 월별 검색 키워드

정보소통광장 인기 콘텐츠 Top 20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베스트 콘텐츠 Top 20



서울시 정보공개
한 눈에 보니
더 큰 믿음이 갑니다

2017년 시민들은 정보소통광장에서 월별로 어떤 정보를 검색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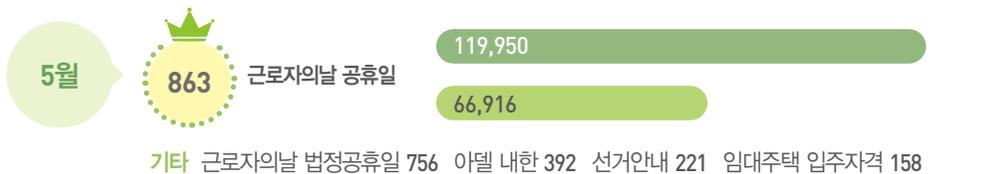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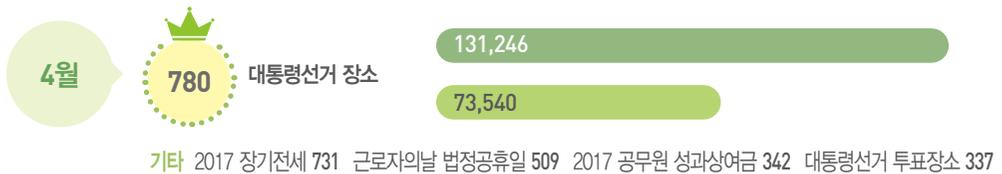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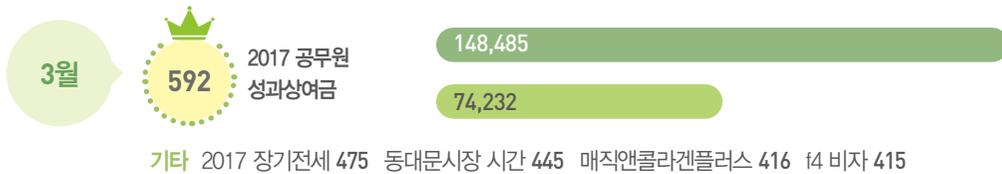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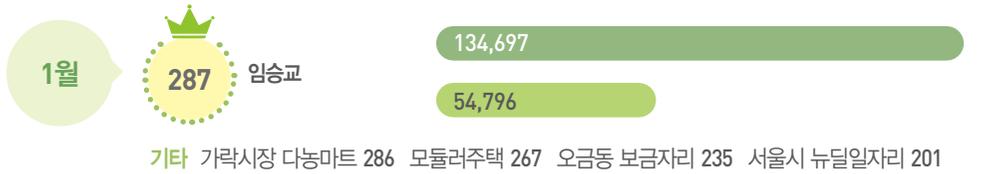
● 총 검색 횟수 ● 총 검색 키워드 수(건) 👑 1위 검색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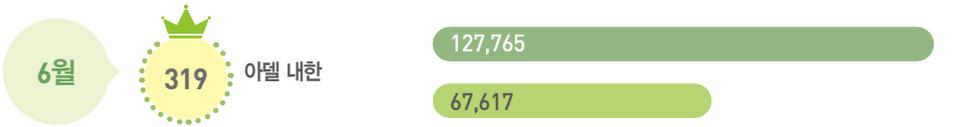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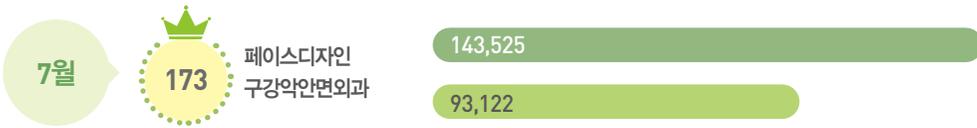
2017년 시민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월별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소통광장을 방문했을까요?

● 총 검색 횟수 ● 총 검색 키워드 수(건) 👑 1위 검색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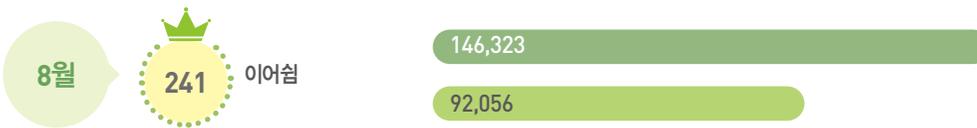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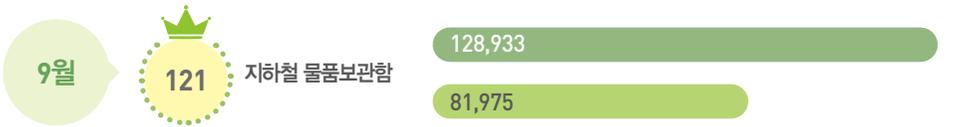
기타 문성체육관 202 페이스디자인 구강악안면외과 183 오금 보금자리 2단지 104 임대주택 입주자격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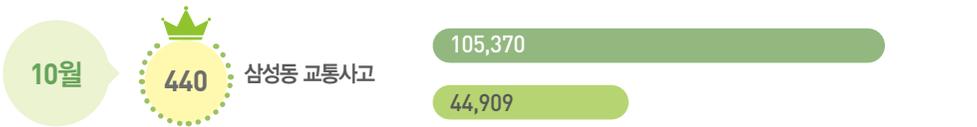
기타 연자재 135 문성체육관 133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92 일상경비 비자 92



기타 한강 야경 234 f비지란 233 무사고경력증명서 135 송파실버케어센터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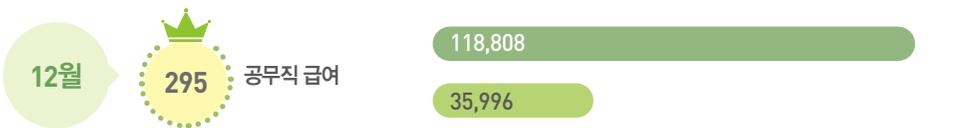
기타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121 지하철 보관함 91 서울시 특수학교 83 청원경찰 직급 재발령 81



기타 국공립심의 92 가락시장 회센터 영업시간 88 장재터널 88 등기권리증 87



기타 2018년 어린이집 보육료 161 잠실실내체육관 사용허가 104 kbs 김장나눔대축제 84 위탁금 84



기타 위탁금 103 가락시장 회센터 영업시간 100 가락시장 휴일 81 2018년 예산편성자침 75

2017년 시민들은 정보소통광장에서 어떤 콘텐츠를 조회했을까요?

단위 : 조회수





2017년 시민들은 정보소통광장에서 어떤 결재문서를 많이 찾아봤을까요?

단위 : 조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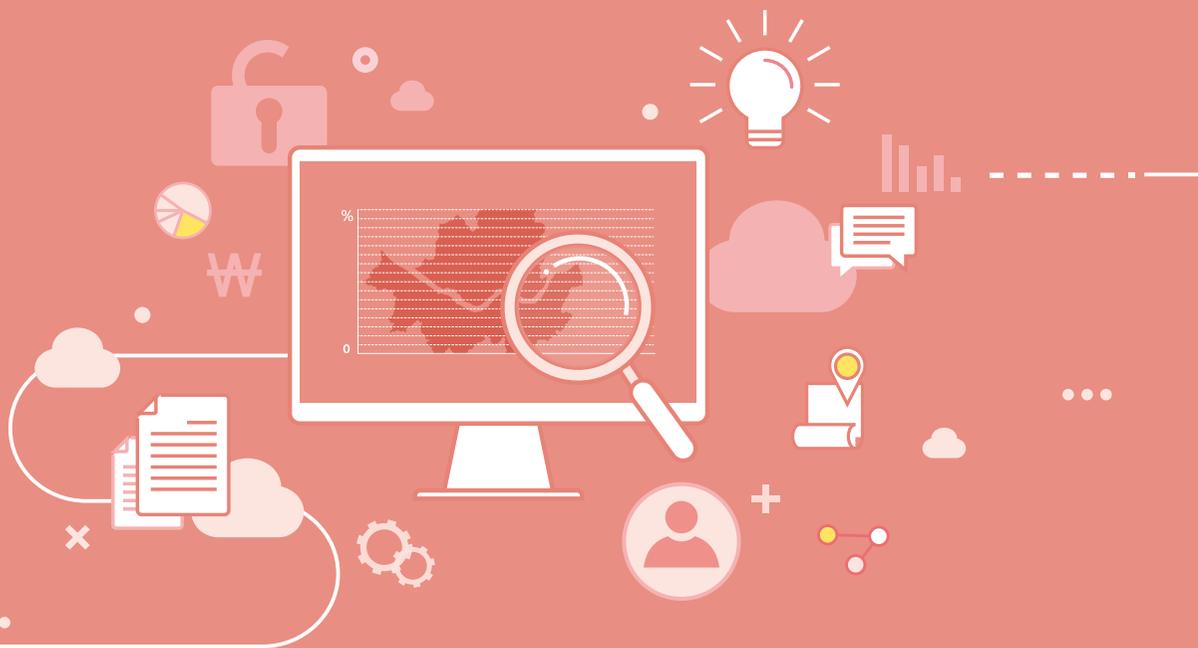


10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1,597
11위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안) 보고	1,590
12위	2015년 감염관리(손위생) QI 활동 결과 보고	1,583
13위	최종 데이터 보고(2016년 노인실태조사)	1,575
14위	대폐차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진화운수)	1,561
15위	9호선 4단계-서울세종 고속도로 병행시공 기술용역 결과보고	1,490
16위	화장품 회수 및 폐기(공고) 알림	1,419
17위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보고 및 면접계획	1,419
18위	2016년 시설·경비 공무원 전환 근로자 호봉적용	1,419
19위	대폐차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북부운수, 신길운수)	1,376
20위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1,340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3.

숫자로 보는 2017 서울시 정보공개

2017년 정보공개 어떻게 했을까?

분야별, 기관별로 비교해보면?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시민 관심정보, 얼마나 공개되었나?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만 쏙쏙 골라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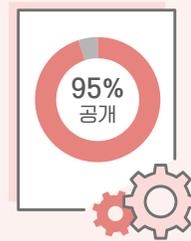
13,365건으로 크게 상승

2017년 서울시에 청구된 정보공개 건수는 총 13,365건이다. 이 중 7,381건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5,984건은 청구 취하 및 타기관 이송 등이다. 7,381건 중 7,013건(95.0%)이 공개되었고, 368건이 비공개되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1년 5,077건이었던 것에 비해 정보소통광장이 오픈한 2012년 9,13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3년엔 감소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13,365건



7,381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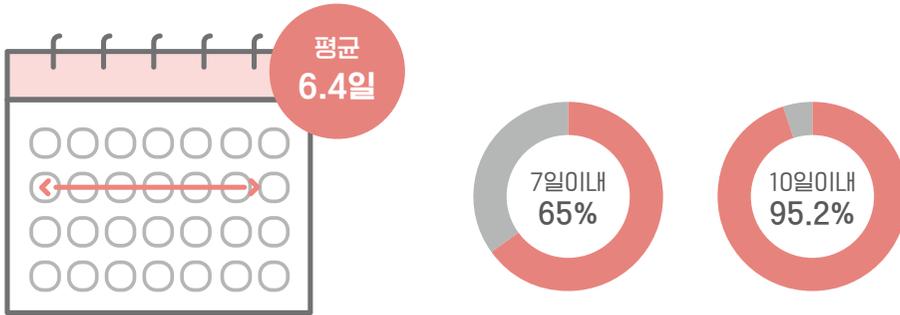
■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7	13,365	7,381	4,817	2,196	368	5,984
2016	10,490	5,770	4,081	1,413	276	4,720
2015	8,319	4,332	3,281	823	228	3,987
2014	6,327	3,617	2,944	537	136	2,710
2013	5,367	3,263	2,781	411	71	2,104
2012	9,133	3,387	2,955	348	84	5,746
2011	5,077	2,652	2,153	232	267	2,425

정보공개청구 평균 처리기간

평균 처리기간 6.4일로 정보공개 요청에 빠르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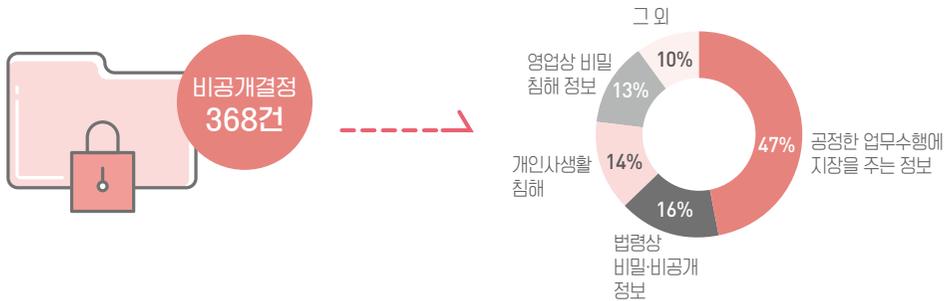
서울시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더욱 빠르게 부응하고자 7일 이내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6.4일이었으며 7일 이내 처리비율은 65.0%, 10일 이내 처리비율은 95.2%로 대부분 법정 기한 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할 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처리기간별 현황

연도	건수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2017	7,381	383	1,756	1,288	1,367	2,235	339	13
2016	5,770	377	1,516	1,023	1,063	1,581	194	16
2015	4,332	261	891	752	908	1,176	320	24
2014	3,617	273	695	632	791	964	404	31
2013	3,263	193	530	520	748	995	234	28
2012	3,387	108	430	574	724	1,116	404	31
2011	2,652	79	337	491	694	778	247	26

비공개 건수와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2017년 비공개 결정 건수는 368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0% 수준이다. 비공개 결정의 주요 사유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47%)가 가장 많았으며,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16%), 개인사생활 침해(14%),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정보(13%)가 뒤를 이었다.



■ 비공개 사유별 현황

연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타 (부존재 등)
2017	368	60	7	5	11	172	51	47	15	-
2016	276	42	6	2	14	141	47	17	7	0
2015	228	46	9	1	4	91	40	33	4	0
2014	136	16	1	5	11	57	21	21	4	0
2013	71	11	4	0	5	22	21	6	2	0
2012	84	13	0	2	7	22	21	12	7	0
2011	267	30	0	1	3	25	37	25	15	131

분야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시민의 가장 큰 관심은 도시안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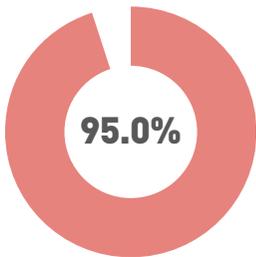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된 13,365건을 16개 분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도시안전 분야가 3,421건 (25.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주택·도시계획(1,566건, 11.7%), 일반 공공행정(1,256건, 9.4%), 환경(931, 7.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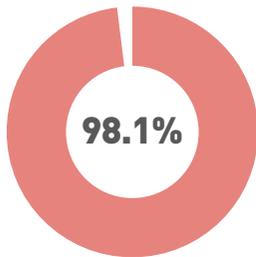
▶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가장 많이 한 부서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정보공개청구 처리가 최다!

2017년 서울시
전체 정보공개율



2017년 처리건수
상위 부서 평균 정보공개율



■ 2017년 정보공개청구 최다 처리 부서 TOP5

(단위 : 건)

정보공개율	처리부서	공개	비공개
	처리건수		
98.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21	4
	225		
96.3%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131	5
	136		
96.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125	5
	130		
100%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110	0
	110		
100%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102	0
	102		

2017년 이의신청 85건

시민의 정보수요 확대에 따른 불복신청 꾸준히 증가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신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불복신청 현황은 이의신청 85건, 행정심판 8건, 행정소송 1건이다.

정보공개 불복신청 현황

(단위 : 건)

연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2017	85	10	24	37	11	3	8	3	2	3	0	1	1	0	0	0
2016	61	8	14	26	11	2	5	0	3	2	0	1	0	0	1	0
2015	67	12	13	21	18	3	12	0	8	3	1	2	0	0	0	2
2014	48	7	14	18	9	0	8	0	4	4	0	1	0	0	1	0
2013	52	23	9	13	7	0	0	0	0	0	0	0	0	0	0	0
2012	33	8	2	10	11	2	0	0	0	0	0	0	0	0	0	0
2011	62	5	18	16	8	15	0	0	0	0	0	0	0	0	0	0

주요 회의록 및 사전공표 등

시민 관심정보에 대해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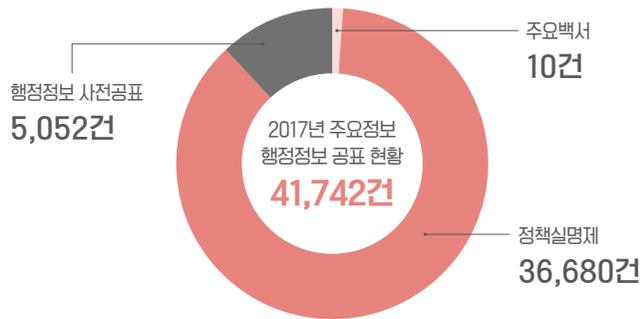
2017년에는 공식위원회 회의록 908건이 공개됐으며, 회의계획, 위원회 구성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복합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시민이 관심 갖는 정보를 중심으로 공표 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 354종 511개 업무에서 2017년 379종 538개 업무로 늘어났으며,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운영 주요 핵심사업 및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현황, 주요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 등을 기록한 백서도 공개하고 있다.

■ 정보소통광장 내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회의 공개 화면



2017년 주요정보 사전 공개현황은 행정정보 사전공표 5,052건, 정책실명제 36,680건, 주요백서 10건 등 총 41,742건이다. 한편 분야별 행정정보 사전공표 건수는 12개 분야 중 공통업무를 제외하고 일반행정, 환경, 주택·도시계획 분야 순으로 많았다.



■ 2017년 분야별 행정정보 사전공표 현황

(단위 : 건)

계	복지	여성 가족	경제	안전	주택 도시 계획	환경	문화 관광	건강 식품	교통	재정 세금	일반 행정	공통 업무
5,052	6	9	18	18	29	45	9	23	5	1	349	4,540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4.

서울시 정보공개 평가와 분석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정확한 정보공개서비스
정직한 평가로
만들어집니다

정보는 바르게, 서비스는 빠르게!

서울시는 정보공개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한차례씩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서울시 45개 기관으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본청, 사업소, 독립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시행한다. 평가항목은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행정정보 공표, 결재문서 원문공개 등이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정보공개율은 2017년 상반기 94.8%, 하반기 95.2%, 평균 95.0%이며, 매년 95%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위 : 건)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7 상반기	3,552	2,284	1,085	183	94.8%
'17 하반기	3,829	2,532	1,112	185	95.2%

다음으로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 적정성은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및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단위 : 건)

구 분	비공개시 명확한 근거 미제시	비공개시 국장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17 상반기	52	63	44
'17 하반기	43	53	63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신속성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스피드지수를 평가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1건당 평균 6.4일이 소요되었으며, 서울시 권장 처리기간인 7일 이내 처리율은 65.0%, 법정 처리기간인 10일 이내 처리율은 95.2%이다. 서울시는 기한 내 처리율을 높이고자 처리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한 도래 사전 알림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단위 : 건)

구 분	계	7일 이내	8~10일	11~20일	20일 초과	평균 처리일
'17 상반기	3,552	2,380	1,023	141	8	6.0일
'17 하반기	3,829	2,414	1,212	198	5	6.8일

사전공표의 적절성

2017년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 업무 중 공개시기가 도래한 건수는 상반기 306건, 하반기 155건이었으며 하반기 공표주기 준수율은 상반기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이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기에 공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위 : 건)

구 분	공표목록		공표주기 준수	공표주기 준수율
	공표대상	공표시기 도래		
'17 상반기	511	306	201	65.7%
'17 하반기	538	155	94	60.6%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2017년에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공개 노력을 신규로 평가했다. 공개율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비공개 설정 문서도 검토했으며, 그 결과 '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공개율은 15.7% 증가, 부적정한 비공개 문서는 8%가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다.

(단위 : 건)

구 분	공개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개선가능 문서 비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7 상반기	73.7%	32,728	13,742	10,379	8,607	12%
'17 하반기	89.4%	33,362	12,947	16,865	3,550	4%

한발 앞선 사전공개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울시는 매년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의 법령상 의무사항,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 노력 전반을 평가하며,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안배하여 실시했다. 특히 기관 간 변별력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심사하였다.

2017년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노력 평가대상은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 15개 출연기관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행정 정보의 사전적·적극적 공개이며, 9개 세부지표로 구분해 평가했다.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 5.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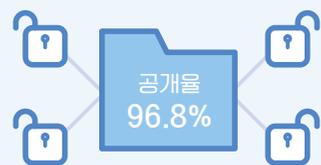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신속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전체 20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15개 기관 모두 외부위원을 50% 이상 두었다. 정보공개 평균처리기간은 5.2일로 서울시 권고기간인 7일 및 법정 처리기간인 10일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 96.8%

부적정한 비공개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공개율 및 비공개 결정사례 평가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은 96.8%였으며, 투자기관의 경우 95.6%,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99.8%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투자·출연기관들이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 주관 부서장 협조 결재, 비공개 결정시 사전심의제, 문서 생산시 비공개 사유 필수 기재, 비공개 대상기준 정비 등 서울시의 정보공개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5.

전문가, 시민이 본 서울시 정보공개

응답하라 1998!

- 서울시의 정보공개 오디세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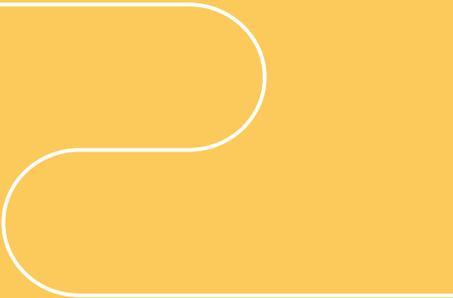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정책

윤여진 (사)언론인권센터 이사

'질문·답변' 많은 서울로 발전하길

이원율 헤럴드경제 기자



정보공개,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서비스입니다.

응답하라 1998!

— 서울시의 정보공개 오디세이아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 1998년 정보공개법의 탄생

우리가 소위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¹⁾은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금은 정보공개법이 일반화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 13번째였으며 일본보다도 이른 아시아 최초였다. 정보공개법 제정이야말로 정부의 행정운영시스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위한 큰 걸음이자 그 결과물이라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다소 케케묵은 논의로 들리지만, 정보공개법 전체의 틀을 원칙적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로 할지 원칙적 비공개와 예외적 공개로 할지 여부와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와의 관련성을 요구할지 여부가 정보공개법 제정 당시의 주요한 쟁점들이었다. 당시 정보공개법 제정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 방식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청구권자와 요청하는 정보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선진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 이 글은 필자가 다수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특히 지난 3년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1)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② 정보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2004년 전면 개정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²⁾,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보와의 관련성이나 공개청구의 목적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위 법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과 비공개해야 할 공익이 공개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개의 의무를 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운용과정에서 정보공개 오남용의 우려를 근거로 공개청구하는 정보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판례 또한 이를 인정하는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로 나누어져 있었다. 특히 복사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수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정보의 경우 행정업무의 마비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3년에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공개청구하는 정보와 청구인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를 확립하였고,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부인하였다.³⁾

2)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와 청구권자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를 확립하였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부인하였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관련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의 판시내용과 5년여 동안의 정보공개법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정보공개법을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7호로 전면 개정하였고⁴⁾, 2004년 전면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현재의 정보공개법에 이르고 있다.

③ 서울시의 정보공개 오디세이아

필자는 현재 로스쿨 교수로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는 필자의 전공영역으로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간의 다수의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활동 경험을 토대로⁵⁾, 서울시의 정보공개업무를 중심으로 이제 성년에 이른 정보공개법의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갈 길을 가능해보고자 한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으로 인한 법제적 정비, 학계의 연구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이론적 정비,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의 실천적 활동, 광통신망을 비롯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등과 같은 기술적 지원 등으로 작금의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상당한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공개법 제정 초기에 있었던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정보공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법제적 측면에서 아직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광범하고 그 규정형식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과 실무적 측면에서 각 기관의 정보공개 의지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양적·질적 상이함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이론과 실무는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선두에 서울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 개정내용은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시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조례 등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비공개 결정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5) 교과서의 편제와 대학의 커리큘럼에서도 정보공개법은 행정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필자는 전공과 교육을 위해서 정보공개법을 연구해 왔으며,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다수의 주요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필자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약 3년가량 되었으며, 현재는 제2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010년대 정보공개의 바다에 새롭고 힘찬 항해를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⁶⁾, 필자가 생각하는 주요한 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가 생산한 모든 문서의 제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첫걸음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문서 제목 공개원칙은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시가 이러한 정보공개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에 직권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서울시가 생산한 정보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담당부서의 편의적 해석과 운용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매우 답답하고 힘든 일일 것이나, 필자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제 공개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을 정보공개심의회에 문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적 결정의 책임과 부담을 피하는 장점을 더 잘 활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식전환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⁷⁾

둘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필자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기 전에 다수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 서울시는 국내의 어느 기관에 비교하여도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⁸⁾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하는 내부위원이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심의나 결론을 주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은 오히려 심의과정에 더 신중을 기하고 그 결정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모든 심의와 결론이 위원회에, 그것도 주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6) 서울시가 발행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7) 현재 서울시는 제1 정보공개심의회와 제2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권심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017년에 18회가 개최되는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매우 자주 개최된다.

8) 가령 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2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은 7명인데, 그 중 5명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이 담당하고 있다(제1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아가 심의과정에서도 정보공개정책과장이 간사로 참여하여 일차적으로 사건 안내를 담당하고, 이차적으로 공무원과 외부 위원과의 소통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외에, 내부위원이나 공무원들이 심의를 주도하려거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를 본 적이 없다.

셋째,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난 3년간 필자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경험한 사건들과 만난 공무원들을 돌아보면, 정보공개에 있어서 서울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사실 담당 부서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피하고 싶어 하는 면이 없지 않은데,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비공개 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에 문의하여 그 결정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즉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공익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특정정보를 비공개해도 좋은지에 관해 질의하는 내용의 직권심의 사건도 많은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제 공개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을 정보공개심의회에 문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적 결정의 책임과 부담을 피하는 장점을 더 잘 활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필자에게는 이것이 서울시가 행정정보의 공개원칙을 어느 기관보다 잘 실현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④ 맺음말 – 응답하라 1998!

1998년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국가와 사회는 모든 국면에서 긴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데 국력을 총집중해야 하고, 또 집중했던 시기가 사실 정보공개 문제가 처음부터 그리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여건이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정의 성과는 바야흐로 2010년대 서울시에서 그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우고 있으니, 어려운 시절 역경을 견디며 지내온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극복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을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아직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광범하고 그 규정형식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는 점이다. 1998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올 해 2018년을 맞이하면 만 20세 성년을 지난 셈이다. 그간의 축적된 이론적 연구와 운영실무의 경험을 토대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정보공개에의 이용자 분류와 정보이용의 질적 측면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본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되었고,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라는 측면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청구권은 주관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의 위원회 활동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효과적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바람직한 민주주의 구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⁹⁾ 이는 단순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서 국민의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단기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정보공개제도가 성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숙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광범한 인터넷망과 빅데이터로 상호 연결된 21세기의 정보공개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오디세이아가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칠 무렵에는 대한민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성큼 한층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으리라 믿고 또 바라마지 않는다.

9) 저작권의 사건 외에 청구인 이의사건들을 살펴보면 정보의 공익적 이용이 아니라 정보를 취득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건이 적지 않다. 사건 전체의 비율을 보더라도 정보의 공익적 이용보다는 개인적 문제나 민원해결성 차원의 정보공개청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제도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정보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정책

윤여진 (사)언론인권센터 이사

언론인권센터는 언론피해구조본부와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 등 3개의 본부가 시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비영리시민단체이다. 언론피해구조본부가 보도피해를 위한 구제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주로 미디어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과 공영방송사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우리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알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의 주된 관심사이고 활동내용이다. 미디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미디어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알권리’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꼭 참고하게 되는 것이 서울시의 정보공개현황과 정책이다.

최근 언론인권센터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예산집행내역 공개를 취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정책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정보공개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서울시만큼만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시민들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전담부서와 시민 ‘눈높이’ 정보공유

서울시가 여타 공공기관과 다른 정보공개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공개전담부서(정보공개정책과)를 설치한 것과 전문인력의 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인력은 민간 경력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으며 또한 시민의 눈높이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

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인다. 2012년부터 시정의 우선순위에 정보공개가 자리잡고 있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결재문서, 회의정보, 사전공표, 정보공개청구 메뉴와 별도로 시민관심정보, 이슈모아보기, 인기 있는 문서 등 시민의 관심사를 찾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정보의 분류이다.

시민관심정보에 있는 “미세먼지 해결사 친환경 보일러 2022년까지 25만대 확대 보급”과 관련해 카드뉴스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의 방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관련 있는 문서’, ‘추천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시민이 정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정보공개정책방향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전국최초 플라스틱 프리 도시 선언” 카드뉴스로 정책의 목표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순히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아니라 시민들과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 플라스틱 사용률 50% 감축을 선언하고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제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과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정책을 공유한 시민들은 플라스틱 프리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관의 시민참여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의 참여자가 되고 시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맥락정보를 찾아가는 검색서비스

특히 “맞춤형 서비스”는 분야별, 생애주기별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관심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개인별 이메일을 통해 가장 적합한 서울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정보 공개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시민들이 기관을 상대로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어디서 찾아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라도 담당부서가 아니면 쉽게 찾기 어려운 정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와 내가 찾고 싶은 정보에 대한 맥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나의 관심사에 대한 키워드 검색만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키워드 ‘태그’검색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행정정보뿐 아니라 정보를 찾는 시민들이 맥락을 찾을 수 있는 관련정보도 제공된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인데 끊임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정보분류와 정보처리시스템은 포털의 검색서비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2017년 서울시의 정보공개는 청구건수 13,365건에 전부공개가 4,817건, 부분공개가 2,196건, 비공개가 368건, 기타 취하 등이 5,984건이다. 전부 및 부분공개 비율이 높을 뿐더러 기타 취하건 등도 정보공개소통광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도 외부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심제도를 통해 안전에 대한 충실한 사전 검토와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보공개와 '알권리'

언론인권센터 입장에서 본다면 여타의 공공기관에 비해 서울시의 정보공개는 대단히 훌륭하다. 시민의 눈높이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투명한 시정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정보접근의 편의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알권리'이다. 네이버 뉴스에서 '서울시'를 검색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한 홍보성 기사가 주를 이룬다. 시정과 관련된 언론의 쓴소리는 볼 수가 없다. 그만큼 언론의 눈으로도 서울시정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없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서울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보공개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론의 감시와 견제일 것이다. 시민은 언론에게 '알권리'를 위임했고 언론의 관점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보공개만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질문 · 답변’ 많은 서울로 발전하길

이원율 헤럴드경제 기자

사과부터 드린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최다 이용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된 건 이유를 불문하고 민망한 일이다. 무수한 공무원이 ‘또 이 사람이야’라며 서랍 속 문서를 찾는 모습을 선명히 떠올릴 수 있다. 질문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명쾌한 답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다. 스토커가 아닌 이상 돌아오는 게 시원찮은데도 말을 계속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공무원 들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은 게 아쉽다. 질문은 풍요에서 자란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옆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질문이 많아진다는 건 그 사회가 올바른 자유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보가 곧 권력이다. 국가에게 정보를 묻고 따지는 건 결국 국가를 향해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과 같다. 독재국가가 하나 같이 질문을 통제하고 정보를 틀어막는 건 우연이 아니다. 권력 견제와 감시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관으로 이름 높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요청 시 원문공개율은 92.6%(2만555건 중 1만9,029건)다. 질문 10개 중 9개 이상에 답변을 한 셈이다. 국내 어느 기관보다 이 시스템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여태 셀 수 없이 많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며 느낀 점을 솔직히 풀어내려는 까닭이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의 한계는 생각보다 질문 양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은 시민 1,000만 명의 도시다.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서울생활 인구는 지난해 말 1,151만 명 수준이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작 시민 0.17%만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한 게 된다. 서울시가 다방면으로 미리 정보공개를 하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상당히 낮은 값이다.

서울시를 두고 ‘정보공개청구 요청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라며 대응방안을 ‘정보공개청구’하면 어떤 답변이 돌아올까.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각종 홍보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돌려 정부 차원의 답변을 안내할지도 모른다. (민망하지만)정보공개

청구 시스템 최다 이용자 중 한 명으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결하다.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이 머리가 아파 활용하지 않는다.

한 시민이 서울시내 금연·흡연구역의 자세한 지정 현황을 알고 싶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해보자. 그는 우선 제목과 청구 내용을 쓸 때부터 멍해짐을 느낀다. 흰색 칸엔 '정보공개청구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청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외에는 안내가 없다. 이에 흘러 서울시내 금연·흡연구역 현황이라고만 입력하면 서울에서 금연·흡연구역이 몇 곳인지 숫자 한 줄만 받을 수도 있다. 정신을 차리고 '2012~2017년 연도별 금연구역 현황과 흡연구역 현황'이라고 하면 어떨까. 최악의 경우 2012~2017년 연도별 금연구역 현황과 함께 연도별이 아닌 '그냥' 현재 흡연구역 전체 현황을 받아볼 수 있다. 금연구역은 2012년 7만9,391개소, 2013년 9만6,928개소 등 나열되는 한편 흡연구역은 현재 기준으로 숫자 하나만 통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받아본 내용에 충실히 답변을 했을 뿐, 결코 근무 태만이 아니다. 시민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다면 애초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서울시내 금연 구역의 위치, 크기, 지정 시기, 관리 주체, 위반 시 과태료 액수 등 알고 싶은 내용을 모두 써야 했다. 문장을 쓸 땐 중의적인 표현으로 오해받지 않게 신경을 기울여야 했을 사항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이를 모두 알고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 안다 해도 하나씩 빠뜨리기 쉽다. 행정 경험 없는 일반 시민은 '아' 하면 '어' 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좀 더 깊은 질문을 써도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일부 부서에선 전화를 해 당신 직업이 무엇이나, 어떤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느냐는 등 질문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연·흡연구역을 두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이렇게 대처한 적은 없으나, 이와 비슷한 일은 서울시의 실·본부·국 곳곳에서 일어난다. 실제로 몇 차례 겪기도 했다. 서울시에 관심법을 바라는 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융통성은 있어야한다고 본다. 올바른 작성법을 알려주는 예시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서울시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정보소통광장'도 허점이 보인다. 서울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미리 공유한다. 특히 결재문서 메뉴에선 하루하루 공무원이 올리는 결재문서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결재문서 공개율은 81.8%(부분공개 포함)이다. 지난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은 정보소통광장의 가치를 최대 56억원으로 매기기도 했다. 서울의 돌아가는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감탄이 나올 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올 들어 개선되기는 했지만 2017년까지 결재문서 상당수는

휴가 신청, 출장 신고 등으로 정보라고 보기 부족한 게 많았다. 물론 투명성이라는 취지로 이런 내용도 공개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지만, 온갖 문서 속에 ‘알짜배기’가 파묻히는 건 사실이다. 하루에 많게는 5,000~6,000개 이상 결재문서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매번 보물찾기를 하긴 쉽지 않다. 겨우 원하는 자료를 찾는다고 해도 부분공개라면 긴장해야 한다. 이 중 상당수는 ‘정보공개 시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음’ 등의 두루뭉술한 말로 형식적인 문장 외에 중요 정보는 모두 가리는 등 비공개를 하느니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질린 시민 사이에서 ‘이런 정보’를 받을 게 뻔한데 무엇하러 공들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느냐는 불멘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이 되레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막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서울시도 계속 보완 중이다. 서울시는 ‘원순씨와 함께 보는 문서’, ‘시민 관심 정보’, ‘이슈 모아보기’, ‘이달의 주요 공개 정보’, ‘인기 있는 문서’, ‘서울의 주요 정책’ 등 세부 메뉴를 통해 결재문서를 분류한다. 하지만 이런 분류 체계는 짙은 안개 한 층을 걷어낼 뿐, 시민 개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다. 공개를 위한 공개일 뿐인 결재문서부터 걸러내는 기준 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 싶다.

다시 쓴다.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이런 문화가 뿌리내려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한 사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질문의 양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정보에 경직성보다 융통성, 양보다 질이라는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서울시가 치열히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6.

통계로 본 정보공개 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서울시 정보공개
통계 2010-2017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0	3,746	2,369	1,883	217	269	1,377
2011	5,077	2,652	2,153	232	267	2,425
2012	9,133	3,387	2,955	348	84	5,746
2013	5,367	3,263	2,781	411	71	2,104
2014	6,327	3,617	2,944	537	136	2,710
2015	8,319	4,332	3,281	823	228	3,987
2016	10,490	5,770	4,081	1,413	276	4,720
2017	13,365	7,381	4,817	2,196	368	5,984

부서별 현황 2017

(단위 : 건)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3,365	7,381	4,817	2,196	368	5,984
대변인 언론담당관	14	7	5	2	-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19	13	9	1	3	6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8	6	2	2	2	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	17	6	2	9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6	4	-	2	2	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7	21	16	5	-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2	10	5	5	-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9	7	2	2	3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2	17	6	1	10	5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2	18	15	3	-	4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5	4	2	2	-	1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17	16	13	3	-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72	59	49	7	3	1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8	15	15	-	-	3
아동복지센터	3	3	-	2	1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46	34	31	3	-	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33	27	19	8	-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57	44	42	2	-	1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0	27	18	9	-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4	8	2	3	3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0	39	33	5	1	1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	1	1	-	-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8	7	7	-	-	1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17	6	4	-	2	1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31	27	20	1	6	4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1	-	-	-	-	1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8	5	5	-	-	3
민생사법경찰단	8	4	1	1	2	4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6	4	3	-	1	2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6	5	4	1	-	1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	2	-	-	-	-	2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6	5	-	1	4	1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5	3	1	2	-	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16	11	10	1	-	5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3	-	-	-	-	3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6	14	7	7	-	2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57	32	29	3	-	25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33	20	17	-	3	1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격정제담당관	12	8	6	2	-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36	22	19	3	-	14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0	8	7	1	-	2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2	9	5	3	1	3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13	11	11	-	-	2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과	4	3	3	-	-	1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12	10	10	-	-	2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19	13	11	2	-	6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12	11	10	1	-	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13	12	10	1	1	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60	52	24	28	-	8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38	31	20	7	4	7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4	3	3	-	-	1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4	4	4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45	25	18	6	1	20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44	30	17	12	1	14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84	59	8	50	1	25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9	5	4	1	-	4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12	9	7	2	-	3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46	36	28	8	-	10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15	4	3	1	-	11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9	7	5	2	-	2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10	7	6	-	1	3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39	34	3	31	-	5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3	3	2	1	-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6	2	1	1	-	4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5	2	2	-	-	3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21	16	11	5	-	5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2	2	-	2	-	-
농업기술센터	7	5	4	-	1	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39	27	15	6	6	12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55	45	40	3	2	10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6	9	5	4	-	7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2	18	13	5	-	4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7	15	13	1	1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2	18	14	3	1	14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15	7	5	2	-	8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59	41	29	8	4	18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155	130	120	5	5	25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12	9	6	2	1	3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58	41	33	5	3	17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69	46	36	4	6	2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69	56	51	3	2	1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57	43	28	10	5	14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47	31	29	1	1	1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96	80	67	11	2	16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27	16	13	3	-	11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60	26	20	6	-	34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1	12	8	4	-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64	45	43	1	1	1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6	12	10	-	2	4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6	1	1	-	-	5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8	2	1	1	-	6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47	32	20	12	-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41	30	23	7	-	1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7	23	15	5	3	14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6	4	3	1	-	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2	14	8	2	4	8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6	6	6	-	-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6	4	4	-	-	2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7	-	-	-	-	7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2	2	2	-	-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7	24	20	3	1	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7	13	13	-	-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43	35	24	6	5	8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1	17	16	1	-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7	7	7	-	-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5	32	23	9	-	1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6	3	3	-	-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23	91	43	46	2	3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1	9	8	1	-	12
차량정비센터	1	1	1	-	-	-
행정국 인력개발과	17	12	7	5	-	5
행정국 인사과	89	82	66	8	8	7
행정국 자치행정과	51	34	30	4	-	17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561	55	48	7	-	506
행정국 총무과	72	57	41	16	-	15
재무국 38세금징수과	7	3	2	-	1	4
재무국 계약심사과	3	3	2	-	1	-
재무국 세무과	21	12	8	1	3	9
재무국 세제과	11	6	5	-	1	5
재무국 자산관리과	34	26	18	8	-	8
재무국 재무과	28	20	17	1	2	8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16	12	7	1	4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37	15	15	-	-	2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8	34	22	4	8	14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4	4	4	-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13	6	4	2	-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7	6	6	-	-	1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6	6	5	-	1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6	25	19	5	1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42	32	29	3	-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74	38	20	15	3	36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46	32	25	7	-	14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35	11	9	2	-	2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4	6	5	1	-	18
도시공간개선단	31	20	4	6	10	11
기술심사담당관	4	1	1	-	-	3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1	1	-	1	-	-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3	3	-	3	-	-
품질시험소 총무과	3	2	1	1	-	1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1	-	-	-	-	1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1	1	1	-	-	-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	2	2	-	-	-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	-	-	-	1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	-	-	-	-	1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	1	-	1	-	-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	2	1	-	1	-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1	1	-	-	-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	-	-	-	-	1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3	2	1	-	1	1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	2	2	-	-	-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	-	-	-	1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3	3	3	-	-	-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1	1	-	-	-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	-	-	-	-	1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	1	1	-	-	1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	-	-	-	-	1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	-	-	-	1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중합발전기획단	6	3	3	-	-	3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22	11	8	1	2	1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99	58	48	6	4	4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29	20	20	-	-	9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12	6	6	-	-	6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38	25	22	3	-	13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향대응과	20	9	6	3	-	1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15	10	6	4	-	5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16	12	10	1	1	4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17	12	6	1	5	5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14	11	4	7	-	3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182	136	129	2	5	46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38	31	9	15	7	7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1	21	17	-	4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98	77	54	12	11	21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53	29	24	4	1	2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17	15	8	1	6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65	55	19	32	4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96	77	52	19	6	1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61	44	21	7	16	1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4	11	9	-	2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72	41	33	6	2	3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75	225	190	31	4	5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28	80	63	14	3	4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26	73	53	9	11	5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98	75	33	20	22	2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12	71	56	12	3	4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15	14	11	3	-	1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2	29	23	3	3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1	-	-	-	-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	3	2	1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1	1	1	-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1	1	1	-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1	-	-	-	-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4	14	11	3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4	3	2	1	-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3	2	2	-	-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	1	1	-	-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46	27	17	6	4	1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77	65	31	33	1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	1	-	1	-	1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10	8	7	1	-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3	19	15	2	2	4
푸른도시국 조경과	24	20	17	3	-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9	16	12	2	2	1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2	3	3	-	-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33	24	23	-	1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63	30	28	2	-	33
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과	2	2	2	-	-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15	14	10	4	-	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11	6	3	-	3	5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5	4	3	-	1	1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2	2	-	2	-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2	1	1	-	-	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8	11	10	1	-	7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7	13	11	1	1	4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6	16	13	3	-	10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4	18	17	-	1	16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2	9	9	-	-	3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5	3	2	1	-	2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1	1	1	-	-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8	7	1	6	-	1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11	8	4	4	-	3
강남소방서 예방과	10	6	2	4	-	4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110	98	3	95	-	12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106	92	1	91	-	14
강동소방서 예방과	4	3	1	2	-	1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82	72	70	2	-	10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25	24	-	24	-	1
강북소방서 예방과	2	-	-	-	-	2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46	40	40	-	-	6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26	20	-	20	-	6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1	1	1	-	-	-
강서소방서 예방과	7	4	3	-	1	3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107	96	-	96	-	11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49	42	31	11	-	7
관악소방서 예방과	2	1	1	-	-	1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73	54	3	51	-	19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46	40	2	38	-	6
광진소방서 예방과	8	6	2	4	-	2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90	77	2	75	-	13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64	57	1	56	-	7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3	2	1	1	-	1
구로소방서 예방과	3	2	1	1	-	1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108	102	44	58	-	6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57	53	44	9	-	4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노원소방서 예방과	1	1	1	-	-	-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67	62	62	-	-	5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42	32	2	30	-	10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1	1	1	-	-	-
도봉소방서 예방과	5	5	2	3	-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63	63	63	-	-	-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27	26	-	26	-	1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8	7	7	-	-	1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65	64	63	1	-	1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45	35	-	35	-	10
동작소방서 예방과	2	-	-	-	-	2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50	43	43	-	-	7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35	32	20	12	-	3
마포소방서 예방과	11	9	3	1	5	2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90	77	76	-	1	13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47	38	1	37	-	9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1	1	1	-	-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4	3	1	2	-	1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56	50	13	37	-	6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45	42	4	38	-	3
서초소방서 예방과	4	3	3	-	-	1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90	82	82	-	-	8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33	29	11	18	-	4
성동소방서 예방과	6	5	5	-	-	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13	11	11	-	-	2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7	6	-	6	-	1
성북소방서 예방과	2	2	2	-	-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46	46	44	1	1	-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36	31	-	30	1	5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송파소방서 예방과	9	6	1	-	5	3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119	110	-	110	-	9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62	48	7	41	-	14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2	-	-	-	-	2
양천소방서 예방과	3	-	-	-	-	3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84	76	-	75	1	8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22	20	-	20	-	2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1	-	-	-	-	1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11	8	8	-	-	3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74	67	67	-	-	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62	52	19	33	-	10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1	1	-	1	-	-
용산소방서 예방과	2	2	1	1	-	-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70	59	56	3	-	11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23	23	10	13	-	-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1	1	1	-	-	-
은평소방서 예방과	6	5	5	-	-	1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67	57	57	-	-	10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36	28	28	-	-	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4	4	3	1	-	-
종로소방서 예방과	3	2	-	1	1	1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59	54	52	2	-	5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45	35	2	33	-	10
종랑소방서 소방행정과	2	1	1	-	-	1
종랑소방서 예방과	1	1	1	-	-	-
종랑소방서 재난관리과	73	67	67	-	-	6
종랑소방서 현장대응단	22	16	16	-	-	6
중부소방서 예방과	8	6	-	6	-	2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50	44	44	-	-	6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43	37	-	37	-	6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1	1	1	-	-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103	88	81	4	3	1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건축부	1	1	-	1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22	17	11	2	4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3	3	2	1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6	6	1	4	1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20	9	6	-	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7	6	5	-	1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20	12	7	1	4	8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15	7	6	-	1	8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2	1	1	-	-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5	2	2	-	-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35	23	17	6	-	12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3	1	1	-	-	2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1	-	1	-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1	-	-	-	-	1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	-	-	-	1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	1	1	-	-	1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	1	1	-	-	1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3	2	2	-	-	1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	2	2	-	-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	2	2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2	1	1	-	-	1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3	2	2	-	-	1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홍보과	6	6	6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4	4	4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6	4	4	-	-	2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1	-	-	-	-	1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1	-	-	-	-	1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1	1	-	1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3	2	2	-	-	1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2	2	-	2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	2	2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	2	2	-	-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4	4	1	3	-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	1	-	1	-	1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	2	2	-	-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3	2	2	-	-	1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 배급수연구과	1	-	-	-	-	1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2	1	1	-	-	1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1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3	-	-	-	-	3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	1	1	-	-	1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	2	2	-	-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2	1	1	-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11	11	11	-	-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6	5	3	1	1	1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2	2	2	-	-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2	1	1	-	-	1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2	1	-	1	-	1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7	5	5	-	-	2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광나루안내센터	1	1	1	-	-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5	4	4	-	-	1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1	1	1	-	-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11	7	5	2	-	4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10	9	5	4	-	1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2	2	1	1	-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4	4	2	2	-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4	4	4	-	-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12	11	8	3	-	1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17	17	16	1	-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5	3	3	-	-	2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1	-	-	-	-	1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113	84	75	5	4	29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2	1	1	-	-	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37	21	21	-	-	16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1	1	1	-	-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3	2	1	1	-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3	2	1	-	1	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3	3	3	-	-	-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3	3	2	-	1	-
어린이병원 간호부	12	11	2	1	8	1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어린이병원 원무과	1	1	-	1	-	-
어린이병원 진료부	4	3	2	-	1	1
은평병원 간호부	5	4	4	-	-	1
은평병원 원무과	3	3	1	1	1	-
은평병원 진료부	2	2	-	-	2	-
서북병원 간호부	12	7	1	3	3	5
서북병원 원무과	4	3	2	1	-	1
서북병원 진료부	1	1	-	-	1	-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1	-	-	-	-	1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7	6	6	-	-	1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3	3	2	1	-	-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5	5	3	2	-	-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18	14	11	1	2	4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2과	1	1	1	-	-	-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	1	1	1	-	-	-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4	3	1	2	-	1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1	1	-	-	1	-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4	3	3	-	-	1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2	1	1	-	-	1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2	-	-	-	-	2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2	2	-	2	-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1	1	1	-	-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	2	-	2	-	-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4	4	3	1	-	-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3	2	2	-	-	1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학예과	2	-	-	-	-	2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교육홍보과	2	1	1	-	-	1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2	-	-	-	-	2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9	7	6	-	1	2

부서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	2	1	-	1	1
교통방송 보도국	1	1	-	1	-	-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영상콘텐츠부	1	1	1	-	-	-
의회사무처 공보실	1	1	1	-	-	-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1	1	1	-	-	-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2	1	1	-	-	1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	2	2	-	-	-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1	-	-	-	-	1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5	5	5	-	-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30	23	19	3	1	7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2	1	-	1	-	1
의회사무처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2	2	2	-	-	-
처리부서미지정	3,204	-	-	-	-	3,204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0	42,989	34,260	27,552	2,816	3,892	-	8,729
2011	44,076	35,349	29,055	3,211	3,083	-	8,727
2012	51,943	34,465	30,555	2,675	1,235	-	17,478
2013	48,907	34,142	30,979	2,363	800	-	14,765
2014	56,663	33,624	30,905	2,032	687	-	23,039
2015	56,079	37,237	33,961	2,462	814	-	18,842
2016	55,518	39,036	35,377	2,576	1,083	13	16,469
2017	61,149	42,488	38,495	2,731	1,262	20	18,641

자치구별 현황 2017

(단위 : 건)

자치구명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61,149	42,488	38,495	2,731	1,262	20	18,641
종로구	2,467	1,727	1,583	74	70	-	740
중구	2,501	1,704	1,491	149	64	-	797
용산구	2,345	1,637	1,501	97	39	1	707
성동구	2,311	1,642	1,437	178	27	-	669
광진구	2,159	1,542	1,435	61	46	-	617
동대문구	2,523	1,694	1,534	119	41	-	829
종량구	2,161	1,522	1,455	56	11	-	639
성북구	2,373	1,710	1,506	149	55	-	663
강북구	2,038	1,398	1,288	76	34	-	640
도봉구	2,064	1,407	1,302	72	33	-	657
노원구	2,210	1,539	1,438	58	43	19	652

자치구명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은평구	2,766	1,995	1,840	127	28	-	771
서대문구	2,348	1,684	1,516	133	35	-	664
마포구	2,698	1,945	1,791	89	65	-	753
양천구	2,236	1,533	1,402	73	58	-	703
강서구	2,362	1,693	1,604	65	24	-	669
구로구	2,148	1,481	1,351	88	42	-	667
금천구	2,136	1,600	1,496	75	29	-	536
영등포구	2,442	1,736	1,549	118	69	-	706
동작구	2,308	1,651	1,490	123	38	-	657
관악구	2,550	1,732	1,577	117	38	-	818
서초구	3,244	2,034	1,668	185	181	-	1,210
강남구	3,548	2,187	1,896	175	116	-	1,361
송파구	2,872	2,056	1,885	131	40	-	816
강동구	2,339	1,639	1,460	143	36	-	700

연도별 현황 2010-2017

(단위 : 건)

기관명	연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교통공사	2017	737	481	465	11	5	-	256
서울시설공단	2010	31	29	26	2	1	-	2
	2011	47	45	34	8	3	-	2
	2012	66	53	49	4	-	-	13
	2013	152	103	87	14	2	-	49
	2014	113	87	74	9	4	-	26
	2015	174	120	109	5	6	-	54
	2016	263	157	131	21	5	-	106
	2017	440	282	247	24	11	-	158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2010	10	10	7	1	2	-	-
	2011	4	4	4	-	-	-	-
	2012	11	11	11	-	-	-	-
	2013	69	58	58	-	-	-	11
	2014	49	40	37	-	3	-	9
	2015	64	56	56	-	-	-	8
	2016	80	65	65	-	-	-	15
	2017	76	39	36	-	3	-	37
서울주택도시공사	2010	168	163	127	8	28	-	5
	2011	147	146	119	12	15	-	1
	2012	110	103	69	10	24	-	7
	2013	188	161	122	20	19	-	27
	2014	231	186	151	19	16	-	45
	2015	317	213	152	43	18	-	104
	2016	430	302	206	64	32	-	128
	2017	415	283	222	31	30	-	132
서울에너지공사	2017	40	24	24	-	-	-	16

기관명	연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의료원	2010	8	5	5	-	-	-	3
	2011	9	2	2	-	-	-	7
	2012	10	7	7	-	-	-	3
	2013	12	7	7	-	-	-	5
	2014	21	18	18	-	-	-	3
	2015	32	32	26	4	2	-	-
	2016	71	54	51	2	1	-	17
	2017	61	28	23	5	-	-	33
서울연구원	2010	1	1	1	-	-	-	-
	2011	3	3	2	1	-	-	-
	2012	8	8	8	-	-	-	-
	2013	56	38	38	-	-	-	18
	2014	38	30	30	-	-	-	8
	2015	44	31	31	-	-	-	13
	2016	85	49	49	-	-	-	36
	2017	101	42	42	-	-	-	59
서울산업진흥원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1	1	1	-	-	-	-
	2013	48	43	42	1	-	-	5
	2014	25	18	17	1	-	-	7
	2015	40	37	37	-	-	-	3
	2016	79	75	75	-	-	-	4
	2017	94	56	56	-	-	-	38
서울신용보증재단	2010	-	-	-	-	-	-	-
	2011	1	1	1	-	-	-	-
	2012	4	-	-	-	-	-	4
	2013	58	32	32	-	-	-	26

기관명	연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신용보증재단	2014	24	21	21	-	-	-	3
	2015	39	28	28	-	-	-	11
	2016	96	32	31	-	1	-	64
	2017	95	26	26	-	-	-	69
세종문화회관	2010	13	11	10	1	-	-	2
	2011	2	2	1	-	1	-	-
	2012	5	5	4	1	-	-	-
	2013	21	20	20	-	-	-	1
	2014	28	25	25	-	-	-	3
	2015	25	19	19	-	-	-	6
	2016	41	31	29	-	2	-	10
	2017	46	36	34	2	-	-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010	-	-	-	-	-	-	-
	2011	1	1	1	-	-	-	-
	2012	7	4	2	2	-	-	3
	2013	64	56	53	1	2	-	8
	2014	21	11	11	-	-	-	10
	2015	32	21	17	3	1	-	11
	2016	63	32	32	-	-	-	31
2017	65	21	18	3	-	-	44	
서울시복지재단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5	4	4	-	-	-	1
	2013	60	42	41	1	-	-	18
	2014	30	21	21	-	-	-	9
	2015	36	24	20	4	-	-	12
	2016	104	36	35	-	1	-	68
	2017	106	27	26	1	-	-	79

기관명	연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문화재단	2010	4	4	4	-	-	-	-
	2011	5	5	5	-	-	-	-
	2012	11	9	9	-	-	-	2
	2013	60	55	55	-	-	-	5
	2014	28	26	26	-	-	-	2
	2015	38	32	32	-	-	-	6
	2016	91	38	37	-	1	-	53
	2017	110	44	44	-	-	-	66
서울시립교향악단	2010	1	1	1	-	-	-	-
	2011	-	-	-	-	-	-	-
	2012	5	5	4	1	-	-	-
	2013	18	18	18	-	-	-	-
	2014	13	13	13	-	-	-	-
	2015	24	21	20	-	1	-	3
	2016	44	34	34	-	-	-	10
	2017	28	24	22	1	1	-	4
서울디자인재단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1	1	1	-	-	-	-
	2013	46	31	30	1	-	-	15
	2014	28	24	22	2	-	-	4
	2015	37	27	24	3	-	-	10
	2016	46	42	38	4	-	-	4
	2017	38	28	21	7	-	-	10
서울장학재단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	-	-	-	-	-	-
	2013	37	33	33	-	-	-	4

기관명	연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장학재단	2014	13	12	12	-	-	-	1
	2015	19	16	16	-	-	-	3
	2016	27	22	22	-	-	-	5
	2017	27	20	20	-	-	-	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016	33	15	14	1	-	-	18
	2017	59	49	48	1	-	-	10
서울관광재단	2017	15	5	4	1	-	-	1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17	67	32	32	-	-	-	35
서울디지털재단	2017	23	9	9	-	-	-	14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2017	16	8	8	-	-	-	8
서울메트로	2010	102	76	57	9	10	-	26
	2011	114	93	70	10	13	-	21
	2012	129	91	78	11	2	-	38
	2013	191	132	111	20	1	-	59
	2014	227	157	135	17	5	-	70
	2015	296	194	157	22	15	-	102
	2016	402	257	219	13	25	-	145
서울도시철도공사	2010	78	44	33	9	2	-	34
	2011	88	52	35	11	6	-	36
	2012	122	91	81	8	2	-	31
	2013	156	131	124	7	-	-	25
	2014	154	118	116	2	-	-	36
	2015	250	199	191	8	-	-	51
	2016	243	169	167	2	-	-	74

※ 2017.5.3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2010	2,369	55	334	524	738	534	168	16
2011	2,652	79	337	491	694	778	247	26
2012	3,387	108	430	574	724	1,116	404	31
2013	3,263	193	530	520	748	995	259	18
2014	3,617	273	695	632	791	964	234	28
2015	4,332	261	891	752	908	1,176	320	24
2016	5,770	377	1,516	1,023	1,063	1,581	194	16
2017	7,381	383	1,756	1,288	1,367	2,235	339	13

부서별 현황 2017

(단위 : 건)

부서명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7,381	383	1,756	1,288	1,367	2,235	339	13
대변인 언론담당관	7	-	1	2	-	3	1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13	-	5	3	3	2	-	-
감사위원회 안전감시담당관	6	-	1	-	4	1	-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17	-	4	1	8	3	1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4	-	1	-	2	1	-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	-	1	2	3	8	7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0	-	2	1	1	6	-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7	-	-	1	1	3	2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17	-	-	7	1	5	4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18	-	-	2	6	10	-	-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4	-	-	1	1	2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16	-	-	14	2	-	-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59	2	19	10	10	16	2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5	-	-	1	-	13	1	-
이동복지센터	3	-	-	2	-	1	-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4	-	2	6	8	16	2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7	-	-	3	8	14	2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44	-	9	5	17	13	-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7	1	6	4	5	11	-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8	-	1	-	-	6	1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9	-	2	-	2	34	1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	-	-	-	1	-	-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7	-	-	-	1	6	-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6	-	1	-	4	1	-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27	1	2	1	6	17	-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5	-	-	2	1	2	-	-
민생사법경찰단	4	-	2	1	-	1	-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4	1	1	-	-	2	-	-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5	-	1	-	1	3	-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5	-	-	-	1	4	-	-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3	-	-	3	-	-	-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11	-	1	1	6	3	-	-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4	-	1	3	3	7	-	-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32	3	12	7	4	5	-	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	2	4	2	4	7	1	-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경제담당관	8	1	-	-	3	4	-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2	-	1	1	5	12	3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8	1	-	4	2	-	1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9	1	3	-	4	-	1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11	-	2	2	3	4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과	3	-	1	-	1	1	-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10	-	1	1	2	5	-	1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13	-	-	1	2	5	4	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11	-	-	-	3	7	1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12	-	1	-	1	9	1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52	-	4	3	12	19	14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31	1	7	8	7	6	2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3	-	-	-	1	2	-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4	-	-	1	3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25	-	7	5	5	7	1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30	-	3	4	7	16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59	-	2	2	11	44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5	-	-	-	5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9	-	1	2	1	5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36	-	1	4	6	18	7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4	-	2	-	2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7	-	-	4	3	-	-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7	-	-	1	2	4	-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34	-	1	2	1	28	2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3	-	-	1	2	-	-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2	-	1	-	-	1	-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2	-	1	1	-	-	-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16	1	3	3	-	4	4	1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2	-	-	-	-	2	-	-
농업기술센터	5	-	-	1	2	2	-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7	2	5	2	2	14	2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45	-	2	4	6	26	7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9	-	-	-	4	4	1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8	-	2	3	3	8	2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5	-	6	-	2	6	1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8	1	1	3	5	7	-	1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7	-	-	-	2	3	2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41	-	2	4	6	25	4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130	1	9	14	15	67	22	2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9	-	-	1	2	6	-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41	5	5	5	10	16	-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46	-	7	8	11	20	-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56	1	10	9	15	20	1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43	1	9	4	10	18	1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31	1	3	6	6	11	4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80	1	3	6	17	37	16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16	-	5	2	4	5	-	-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26	-	2	1	7	14	1	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12	-	1	1	4	6	-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45	2	6	3	9	19	6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2	-	-	2	2	5	3	-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1	-	-	-	1	-	-	-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2	-	-	-	-	2	-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2	-	3	3	10	14	1	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0	-	6	5	6	13	-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3	-	2	7	7	6	1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4	-	2	-	2	-	-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4	-	1	3	1	8	1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6	-	4	-	-	2	-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4	-	1	1	2	-	-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2	-	1	-	-	1	-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4	3	3	4	7	6	1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3	-	2	2	5	4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5	1	3	2	10	17	2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17	-	1	4	3	8	1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7	2	-	-	2	3	-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32	-	2	6	8	15	1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3	-	1	-	-	1	1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1	-	3	11	8	56	13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9	-	-	1	3	3	2	-
차량정비센터	1	-	-	-	-	1	-	-
행정국 인력개발과	12	-	-	3	2	7	-	-
행정국 인사과	82	-	10	7	14	49	2	-
행정국 자치행정과	34	1	4	3	2	24	-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55	2	15	9	10	13	6	-
행정국 총무과	57	-	6	1	7	28	14	1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	-	1	-	1	1	-	-
재무국 계약심사과	3	-	1	1	-	1	-	-
재무국 세무과	12	-	1	4	5	2	-	-
재무국 세제과	6	-	1	-	2	2	1	-
재무국 자산관리과	26	-	3	5	7	10	1	-
재무국 재무과	20	1	2	3	2	12	-	-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12	-	-	-	1	11	-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15	1	3	4	6	1	-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4	-	2	3	8	21	-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4	-	1	2	-	1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6	-	-	-	1	3	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6	-	1	1	2	2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6	-	3	-	-	3	-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5	-	1	2	4	17	1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32	-	4	4	2	22	-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8	-	8	2	9	19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32	2	7	5	5	12	1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11	1	2	3	5	-	-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6	-	-	1	3	2	-	-
도시공간개선단	20	1	2	8	6	3	-	-
기술심사담당관	1	-	-	-	-	1	-	-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1	-	1	-	-	-	-	-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3	-	1	-	-	2	-	-
품질시험소 총무과	2	-	1	-	1	-	-	-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1	-	1	-	-	-	-	-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	-	-	1	-	1	-	-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	-	-	-	1	-	-	-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	-	-	1	-	1	-	-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1	-	-	-	-	-	-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2	-	1	-	-	1	-	-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	-	-	-	-	1	1	-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3	-	-	-	-	3	-	-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	1	-	-	-	-	-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	1	-	-	-	-	-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중합발전기획단	3	-	2	-	-	1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11	-	1	2	2	6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58	1	7	6	16	23	4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20	-	6	2	3	9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6	-	1	-	3	2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25	1	5	7	2	9	1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9	-	-	-	2	7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10	-	1	2	4	3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12	-	1	1	2	7	1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12	1	2	4	2	3	-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11	-	-	1	3	7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136	-	20	24	33	51	7	1
도시재생본부 역도심재생과	31	-	1	5	6	15	4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1	-	1	-	7	12	1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77	-	12	12	19	32	2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29	-	7	3	10	9	-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15	-	1	2	2	9	1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55	2	1	8	29	15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77	7	21	19	7	21	2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44	-	3	10	11	18	2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1	1	-	2	4	4	-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41	2	7	3	11	17	1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25	2	32	22	35	92	42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80	1	16	11	13	34	5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73	5	16	16	18	15	3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75	3	5	11	11	33	12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71	-	9	9	13	36	4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14	-	-	-	6	8	-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9	-	2	1	2	24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	-	1	-	1	-	1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1	-	1	-	-	-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1	-	-	-	1	-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4	-	1	1	4	8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3	-	-	-	2	1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2	-	-	-	-	1	1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1	-	-	-	-	-	1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7	-	3	3	4	15	2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65	-	5	3	10	47	-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	-	-	-	-	1	-	-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8	-	1	5	-	2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9	-	-	1	10	7	1	-
푸른도시국 조경과	20	-	2	4	1	12	1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6	-	-	-	5	11	-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3	-	-	-	1	2	-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4	1	2	5	6	10	-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30	-	6	4	5	9	6	-
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과	2	-	1	-	-	1	-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14	-	2	1	6	4	-	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6	-	1	-	1	3	1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4	-	2	1	-	1	-	-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2	-	-	2	-	-	-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시담당관	1	-	1	-	-	-	-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1	3	2	2	3	1	-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3	3	3	4	-	3	-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16	2	3	3	5	3	-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8	1	1	2	6	7	1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9	2	1	-	3	3	-	-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3	-	1	-	1	1	-	-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1	-	-	-	1	-	-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1	-	-	-	-	1	-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88	6	37	20	17	8	-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7	-	-	1	4	2	-	-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8	-	1	1	4	2	-	-
강남소방서 예방과	6	-	4	1	1	-	-	-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98	7	41	26	21	3	-	-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92	9	22	40	16	5	-	-
강동소방서 예방과	3	1	1	-	-	1	-	-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72	2	44	17	6	3	-	-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24	-	6	9	5	4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40	2	13	15	9	1	-	-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20	2	14	4	-	-	-	-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1	-	-	-	1	-	-	-
강서소방서 예방과	4	-	-	1	1	2	-	-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96	13	39	26	8	10	-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42	4	18	11	4	5	-	-
관악소방서 예방과	1	-	1	-	-	-	-	-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54	21	26	4	3	-	-	-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40	2	16	11	5	3	3	-
광진소방서 예방과	6	1	3	2	-	-	-	-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77	11	13	20	19	13	1	-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57	15	33	8	1	-	-	-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2	-	1	-	-	1	-	-
구로소방서 예방과	2	1	-	-	-	1	-	-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102	32	51	11	7	1	-	-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53	5	33	11	2	2	-	-
노원소방서 예방과	1	-	-	-	-	1	-	-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62	11	19	10	11	9	2	-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32	1	15	10	3	3	-	-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1	-	-	1	-	-	-	-
도봉소방서 예방과	5	-	2	1	2	-	-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63	4	36	16	4	3	-	-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26	-	9	13	3	1	-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7	-	4	3	-	-	-	-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64	11	34	10	7	2	-	-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35	1	5	13	14	2	-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43	5	19	11	8	-	-	-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32	3	21	6	2	-	-	-
마포소방서 예방과	9	-	-	2	7	-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77	12	34	13	10	7	1	-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38	2	20	10	6	-	-	-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1	-	-	-	1	-	-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3	1	1	-	-	1	-	-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50	12	25	6	4	2	1	-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42	5	24	7	2	4	-	-
서초소방서 예방과	3	-	2	-	-	1	-	-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82	6	26	21	20	9	-	-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29	5	15	3	3	3	-	-
성동소방서 예방과	5	-	-	3	2	-	-	-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11	-	6	3	-	2	-	-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6	1	3	2	-	-	-	-
성북소방서 예방과	2	-	-	-	1	1	-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46	9	23	5	6	3	-	-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31	1	14	11	3	2	-	-
송파소방서 예방과	6	-	1	1	-	4	-	-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110	5	32	33	20	20	-	-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48	2	13	22	7	4	-	-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76	2	44	22	6	1	1	-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20	-	6	6	3	5	-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8	-	3	1	2	2	-	-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67	10	36	8	10	3	-	-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52	-	22	12	7	10	1	-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1	-	1	-	-	-	-	-
용산소방서 예방과	2	-	1	1	-	-	-	-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59	6	22	13	15	3	-	-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23	2	12	4	3	2	-	-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1	-	-	1	-	-	-	-
은평소방서 예방과	5	-	5	-	-	-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57	11	19	21	6	-	-	-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28	2	10	6	8	1	1	-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4	1	1	1	-	1	-	-
종로소방서 예방과	2	-	-	-	-	2	-	-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54	4	18	8	7	17	-	-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35	1	16	11	3	4	-	-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1	-	-	1	-	-	-	-
중랑소방서 예방과	1	-	1	-	-	-	-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67	6	39	17	5	-	-	-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16	3	8	2	2	1	-	-
중부소방서 예방과	6	-	2	3	-	1	-	-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44	8	20	7	6	3	-	-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37	4	20	9	4	-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건축부	1	-	-	-	-	1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17	1	4	4	6	2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3	-	-	1	-	-	2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6	-	-	3	2	1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9	-	-	1	2	3	3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6	-	2	2	2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12	-	-	1	1	7	3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7	-	-	1	1	5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1	-	-	1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2	-	1	1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23	-	2	4	6	9	2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1	-	-	-	1	-	-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	1	-	-	-	-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1	-	-	-	-	-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1	-	1	-	-	-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1	-	-	1	-	-	-	-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	1	-	-	-	-	-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	-	-	-	-	2	-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	-	-	-	2	-	-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	-	1	-	-	-	-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	-	-	-	1	1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2	-	1	1	-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홍보과	6	-	1	1	2	2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4	-	1	-	3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4	-	1	-	2	1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1	-	1	-	-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1	-	1	-	-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2	-	-	-	-	1	1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1	-	-	1	-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2	-	-	-	1	-	1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	-	-	1	-	1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1	-	-	-	1	-	-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	-	1	-	-	1	-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4	-	-	1	-	3	-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	-	-	1	1	-	-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	-	1	-	-	-	1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	-	-	1	-	-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 부신물질분석과	1	-	-	-	-	1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1	-	1	-	-	-	-	-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1	-	-	-	-	1	-	-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1	1	-	-	-	-	-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	-	1	-	-	-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	-	-	-	1	1	-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	1	-	1	-	-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11	-	-	-	2	7	2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5	-	1	-	1	3	-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2	-	-	-	1	1	-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1	-	-	-	1	-	-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1	-	-	-	-	1	-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5	-	1	-	2	2	-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광나루안내센터	1	-	-	-	-	1	-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4	-	1	1	-	2	-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1	-	-	-	-	1	-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7	-	1	-	1	5	-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9	1	-	1	-	7	-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2	-	-	1	-	-	1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4	-	-	-	2	1	1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4	-	2	-	1	1	-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11	-	1	3	7	-	-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17	-	2	4	3	8	-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3	-	1	-	-	2	-	-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84	2	26	35	15	6	-	-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1	-	-	1	-	-	-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21	-	9	8	3	1	-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1	-	1	-	-	-	-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2	-	1	-	-	1	-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2	-	-	1	1	-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3	-	2	-	1	-	-	-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3	-	-	2	-	1	-	-
어린이병원 간호부	11	1	5	-	4	1	-	-
어린이병원 원무과	1	-	-	1	-	-	-	-
어린이병원 진료부	3	-	-	-	1	1	1	-
은평병원 간호부	4	-	1	2	1	-	-	-
은평병원 원무과	3	-	-	1	1	1	-	-
은평병원 진료부	2	-	2	-	-	-	-	-
서북병원 간호부	7	-	1	-	5	1	-	-
서북병원 원무과	3	-	-	-	2	1	-	-
서북병원 진료부	1	-	-	-	-	1	-	-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6	-	-	-	1	5	-	-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3	-	-	1	1	1	-	-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5	-	-	-	3	2	-	-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14	-	-	1	4	-	9	-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2과	1	-	-	-	-	1	-	-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	1	-	-	-	1	-	-	-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3	-	-	-	-	3	-	-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1	-	-	-	1	-	-	-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3	-	2	-	1	-	-	-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1	-	-	1	-	-	-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2	-	-	-	1	1	-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1	-	-	-	-	1	-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	-	-	1	1	-	-	-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4	-	1	-	1	2	-	-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2	-	-	-	-	1	1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교육홍보과	1	-	-	1	-	-	-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7	-	4	1	1	1	-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2	-	-	-	1	1	-	-

부서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교통방송 보도국	1	-	1	-	-	-	-	-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영상콘텐츠부	1	-	-	-	-	1	-	-
의회사무처 공보실	1	-	1	-	-	-	-	-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1	-	-	1	-	-	-	-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1	-	1	-	-	-	-	-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	1	-	1	-	-	-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5	-	-	2	2	1	-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23	-	1	-	3	18	1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1	-	-	-	-	1	-	-
의회사무처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2	-	-	-	1	1	-	-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2010	34,260	1,060	6,229	6,556	7,127	11,240	1,810	238
2011	35,349	1,136	6,105	6,372	7,282	12,293	1,899	262
2012	34,465	1,029	5,800	6,378	7,473	12,114	1,555	116
2013	34,142	1,892	7,920	8,174	7,421	7,563	1,070	102
2014	33,624	1,786	8,479	8,456	7,867	6,135	853	48
2015	37,237	1,765	9,440	8,880	8,496	7,525	1,053	78
2016	39,038	1,851	10,762	8,950	7,760	8,667	986	62
2017	42,488	1,986	11,579	9,258	8,144	10,186	1,261	74

자치구별 현황 2017

(단위 : 건)

자치구명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42,488	1,986	11,579	9,258	8,144	10,186	1,261	74
종로구	1,727	73	425	442	362	362	57	6
중구	1,704	67	364	348	302	503	110	10
용산구	1,637	146	492	377	252	329	41	-
성동구	1,642	102	584	407	278	253	17	1
광진구	1,542	123	606	285	211	279	35	3
동대문구	1,694	96	441	272	294	540	49	2
종량구	1,522	50	507	372	499	83	11	-
성북구	1,710	42	479	377	444	316	49	3
강북구	1,398	32	323	380	433	214	16	-
도봉구	1,407	130	462	319	381	107	8	-
노원구	1,539	62	362	297	249	455	87	27
은평구	1,995	60	347	387	320	798	80	3

자치구명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서대문구	1,684	71	564	397	356	280	16	-
마포구	1,945	94	529	400	513	327	82	-
양천구	1,533	88	542	354	276	233	39	1
강서구	1,693	77	408	380	295	469	64	-
구로구	1,481	69	396	415	280	297	22	2
금천구	1,600	136	495	248	228	479	13	1
영등포구	1,736	51	310	368	373	569	64	1
동작구	1,651	44	439	464	292	391	21	-
관악구	1,732	60	451	461	260	433	63	4
서초구	2,034	118	591	346	306	612	59	2
강남구	2,187	35	374	375	367	832	196	8
송파구	2,056	115	633	424	298	551	35	-
강동구	1,639	45	455	363	275	474	27	-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2010	269	78	-	4	4	36	21	25	6	95
2011	267	30	-	1	3	25	37	25	15	131
2012	84	13	-	2	7	22	21	12	7	-
2013	71	11	4	-	5	22	21	6	2	-
2014	136	16	1	5	11	57	21	21	4	-
2015	228	46	9	1	4	91	40	33	4	-
2016	276	42	6	2	14	141	47	17	7	-
2017	368	60	7	5	11	172	51	47	15	-

부서별 현황 2017

(단위 : 건)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계	368	60	7	5	11	172	51	47	15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3	-	-	-	-	1	2	-	-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2	-	-	-	-	2	-	-	-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9	1	-	-	1	4	3	-	-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	-	-	-	-	2	-	-	-	-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3	-	-	-	-	1	2	-	-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10	-	-	-	-	10	-	-	-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3	-	-	-	-	-	3	-	-	-
이동복지센터	1	-	-	-	1	-	-	-	-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3	3	-	-	-	-	-	-	-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	-	-	-	-	-	-	1	-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	2	-	-	-	-	-	-	-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6	-	-	-	-	6	-	-	-	-
민생사법경찰단	2	-	-	-	2	-	-	-	-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	-	1	-	-	-	-	-	-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4	-	3	-	-	1	-	-	-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3	-	-	-	-	3	-	-	-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	-	1	-	-	-	-	-	-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1	-	-	-	-	-	1	-	-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4	-	-	-	-	-	4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1	-	-	-	-	-	-	-	1	-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1	-	-	-	-	-	1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1	-	-	-	-	1	-	-	-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1	-	-	-	-	1	-	-	-	-
농업기술센터	1	1	-	-	-	-	-	-	-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6	-	-	-	-	4	-	2	-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	-	-	-	1	1	-	-	-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	-	-	-	-	-	1	-	-	-
복지본부 장애인지립지원과	1	-	-	-	-	-	1	-	-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4	-	-	-	-	2	-	2	-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5	1	-	-	-	1	2	1	-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1	-	-	-	-	1	-	-	-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3	1	-	-	-	-	1	1	-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6	-	-	-	-	5	-	1	-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2	-	-	-	-	-	2	-	-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5	-	-	-	-	3	-	1	1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1	-	-	-	-	1	-	-	-	-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	2	-	-	-	-	-	-	-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	1	-	-	-	-	-	-	-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	-	-	1	-	1	-	-	-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	-	-	-	-	2	-	1	-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4	-	-	-	-	-	-	4	-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1	-	-	-	-	1	-	-	-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5	2	-	-	-	1	1	1	-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	-	-	-	-	2	-	-	-	-
행정국 인사과	8	3	-	-	-	1	3	1	-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1	-	-	-	-	-	1	-	-	-
재무국 계약심사과	1	-	-	-	-	1	-	-	-	-
재무국 세무과	3	3	-	-	-	-	-	-	-	-
재무국 세제과	1	1	-	-	-	-	-	-	-	-
재무국 재무과	2	-	-	-	-	1	-	1	-	-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4	-	-	-	-	-	-	4	-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8	-	-	-	-	7	1	-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1	-	-	-	-	-	-	1	-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	1	-	-	-	-	-	-	-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	1	-	-	2	-	-	-	-	-
도시공간개선단	10	5	-	-	-	5	-	-	-	-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	1	-	-	-	-	-	-	-	-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	-	-	-	-	1	-	-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2	-	-	-	-	2	-	-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4	-	-	-	-	1	1	2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1	1	-	-	-	-	-	-	-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5	-	-	-	-	4	-	1	-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5	-	-	-	1	4	-	-	-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7	-	-	-	-	6	-	-	1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4	-	-	-	-	4	-	-	-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1	1	-	-	-	5	-	5	-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1	-	-	-	-	1	-	-	-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6	-	-	-	-	6	-	-	-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4	-	-	-	-	4	-	-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	4	-	-	-	2	-	-	-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16	5	-	-	-	7	1	-	3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	-	-	-	-	2	-	-	-	-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	-	-	-	-	1	-	1	-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4	3	-	1	-	-	-	-	-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3	-	-	-	-	3	-	-	-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1	-	-	-	-	5	4	-	2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2	1	-	-	-	14	1	-	6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3	1	-	-	-	1	1	-	-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	1	-	-	-	1	1	-	-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4	-	2	-	-	2	-	-	-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1	-	-	-	-	1	-	-	-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	-	-	-	-	2	-	-	-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	-	-	-	-	2	-	-	-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	-	-	-	-	1	-	-	-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	-	-	-	-	2	-	-	1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1	-	-	-	-	1	-	-	-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	-	-	-	-	-	-	1	-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	-	-	1	-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3	-	-	-	-	-	3	-	-	-
강서소방서 예방과	1	-	-	-	-	-	1	-	-	-
마포소방서 예방과	5	1	-	-	-	-	-	4	-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1	-	-	-	-	-	1	-	-	-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1	-	-	-	-	-	1	-	-	-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1	-	-	-	-	-	1	-	-	-
송파소방서 예방과	5	4	-	-	-	1	-	-	-	-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1	-	-	-	-	-	1	-	-	-
종로소방서 예방과	1	-	-	-	-	-	1	-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4	-	-	-	-	4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1	-	-	-	-	-	-	1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3	-	-	-	3	-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1	-	-	-	-	-	-	1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4	-	-	1	-	1	-	2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1	-	-	-	-	-	-	1	-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1	-	-	-	-	-	-	1	-	-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4	-	-	-	-	4	-	-	-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1	-	-	-	-	1	-	-	-	-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1	1	-	-	-	-	-	-	-	-
어린이병원 간호부	8	3	-	-	-	3	1	1	-	-
어린이병원 진료부	1	-	-	-	-	-	1	-	-	-
은평병원 원무과	1	-	-	-	-	-	-	1	-	-
은평병원 진료부	2	2	-	-	-	-	-	-	-	-

부서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서북병원 간호부	3	3	-	-	-	-	-	-	-	-
서북병원 진료부	1	-	-	-	-	-	1	-	-	-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2	-	-	-	-	-	-	2	-	-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1	-	-	1	-	-	-	-	-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1	-	-	-	-	1	-	-	-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	-	-	-	-	-	-	1	-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1	-	-	-	-	-	1	-	-	-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자치구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2010	3,892	1,350	3	28	36	55	302	83	84	1,951
2011	3,083	304	3	21	43	60	463	135	68	1,986
2012	1,235	362	4	31	59	92	442	137	108	-
2013	800	170	4	34	38	92	329	81	52	-
2014	687	130	9	53	34	23	332	72	34	-
2015	814	194	13	45	46	58	325	93	40	-
2016	1,083	313	7	45	61	134	362	121	40	-
2017	1,262	288	17	40	57	172	497	137	54	-

자치구별 현황 2017

(단위 : 건)

자치구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계	1,262	288	17	40	57	172	497	137	54	-
종로구	70	4	2	9	2	8	31	6	8	-
중구	64	20	-	1	1	8	13	18	3	-
용산구	39	12	-	1	2	4	14	4	2	-
성동구	27	6	1	3	1	4	9	3	-	-
광진구	46	14	1	3	1	13	8	5	1	-

자치구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부존재 등
동대문구	41	16	1	-	1	5	16	2	-	-
종량구	11	3	1	1	-	2	3	1	-	-
성북구	55	8	-	2	3	4	27	10	1	-
강북구	34	7	-	-	2	7	12	3	3	-
도봉구	33	3	1	-	1	16	9	1	2	-
노원구	43	7	3	2	2	10	13	3	3	-
은평구	28	6	1	-	2	11	4	4	-	-
서대문구	35	8	-	1	1	6	18	1	-	-
마포구	65	21	-	3	2	6	21	11	1	-
양천구	58	30	1	1	-	6	13	7	-	-
강서구	24	9	-	1	1	1	7	4	1	-
구로구	42	29	-	1	1	4	6	-	1	-
금천구	29	7	-	2	2	2	12	4	-	-
영등포구	69	15	2	-	1	3	34	12	2	-
동작구	38	5	-	-	1	11	15	3	3	-
관악구	38	7	-	-	2	3	24	1	1	-
서초구	181	9	1	4	11	18	115	7	16	-
강남구	116	24	1	2	8	15	42	21	3	-
송파구	40	5	1	1	5	3	22	2	1	-
강동구	36	13	-	2	4	2	9	4	2	-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승					
	신청 건수	처리 결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2010	77	23	31	8	13	2	-	-	-	-	-	-	-	-	-	-	-
2011	62	5	18	16	8	15	-	-	-	-	-	-	-	-	-	-	-
2012	33	8	2	10	11	2	-	-	-	-	-	-	-	-	-	-	-
2013	52	23	9	13	7	-	-	-	-	-	-	-	-	-	-	-	-
2014	48	23	9	13	7	-	8	-	4	4	-	1	-	-	1	-	-
2015	67	12	13	21	18	3	12	-	8	3	1	2	-	-	-	-	2
2016	61	8	14	26	11	2	5	-	3	2	-	1	-	-	1	-	-
2017	85	10	24	37	11	3	8	3	2	3	-	1	1	-	-	-	-

부서별 현황 2017

(단위 : 건)

부서명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승					
	신청 건수	처리 결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85	10	24	37	11	3	8	3	2	3	-	1	1	-	-	-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1	-	-	-	1	-	1	-	-	1	-	-	-	-	-	-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1	-	1	-	-	-	-	-	-	-	-	-	-	-	-	-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9	-	4	5	-	-	-	-	-	-	-	-	-	-	-	-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	-	-	-	-	1	-	-	1	-	-	-	-	-	-	-

부서명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2	-	-	1	1	-	-	-	-	-	-	-	-	-	-	-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1	-	1	-	-	-	-	-	-	-	-	-	-	-	-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1	-	1	-	-	-	-	-	-	-	-	-	-	-	-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1	-	-	1	-	-	-	-	-	-	-	-	-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2	-	-	2	-	-	-	-	-	-	-	-	-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1	-	-	1	-	-	-	-	-	-	-	-	-	-	-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	-	-	-	-	-	-	-	-	-	1	1	-	-	-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	-	-	1	1	-	-	-	-	-	-	-	-	-	-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	1	-	1	-	-	-	-	-	-	-	-	-	-	-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	-	-	-	-	1	-	1	-	-	-	-	-	-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4	-	2	2	-	-	-	-	-	-	-	-	-	-	-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2	-	1	1	-	-	2	1	-	1	-	-	-	-	-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1	-	-	1	-	-	-	-	-	-	-	-	-	-	-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	-	-	2	-	-	-	-	-	-	-	-	-	-	-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1	-	-	1	-	-	-	-	-	-	-	-	-	-	-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	-	-	-	1	-	-	-	-	-	-	-	-	-	-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5	-	1	1	2	1	-	-	-	-	-	-	-	-	-	-
행정국 인사과	4	-	1	1	2	-	-	-	-	-	-	-	-	-	-	-
행정국 총무과	1	-	-	1	-	-	-	-	-	-	-	-	-	-	-	-

부서명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승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재무국 세제과	1	-	-	1	-	-	-	-	-	-	-	-	-	-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1	-	-	1	-	-	-	-	-	-	-	-	-	-	-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	-	-	-	1	-	-	-	-	-	-	-	-	-	-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	-	-	1	-	1	-	-	-	-	-	-	-	-	-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1	-	1	-	-	-	-	-	-	-	-	-	-	-	-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2	-	1	1	-	-	-	-	-	-	-	-	-	-	-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1	-	-	1	-	-	-	-	-	-	-	-	-	-	-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	-	1	1	-	-	1	1	-	-	-	-	-	-	-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1	-	-	1	-	-	-	-	-	-	-	-	-	-	-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1	-	1	-	-	-	-	-	-	-	-	-	-	-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	-	3	-	-	-	-	-	-	-	-	-	-	-	-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6	-	4	2	-	-	-	-	-	-	-	-	-	-	-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	1	-	-	-	-	-	-	-	-	-	-	-	-	-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1	-	-	-	1	1	1	-	-	-	-	-	-	-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	-	-	1	-	-	-	-	-	-	-	-	-	-	-	-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1	-	1	-	-	-	-	-	-	-	-	-	-	-	-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	-	-	-	1	-	-	-	-	-	-	-	-	-	-	-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1	-	-	-	1	-	-	-	-	-	-	-	-	-	-	-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1	1	-	-	-	-	-	-	-	-	-	-	-	-	-	-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1	1	-	-	-	-	-	-	-	-	-	-	-	-	-	-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1	1	-	-	-	-	-	-	-	-	-	-	-	-	-	-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1	1	-	-	-	-	-	-	-	-	-	-	-	-	-	-

부서명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1	1	-	-	-	-	-	-	-	-	-	-	-	-	-	-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1	1	-	-	-	-	-	-	-	-	-	-	-	-	-	-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1	1	-	-	-	-	-	-	-	-	-	-	-	-	-	-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1	-	-	1	-	-	-	-	-	-	-	-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1	-	-	1	-	-	-	-	-	-	-	-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1	-	-	1	-	-	-	-	-	-	-	-	-	-	-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2	-	-	2	-	-	-	-	-	-	-	-	-	-	-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	-	-	-	-	1	-	1	-	-	-	-	-	-	-

연도별 총괄 2010-2017

(단위 : 건)

연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결결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2010	327	91	98	79	45	14	1	-	-	-	1	-	-	-	-	-
2011	226	43	80	67	26	10	-	-	-	-	-	-	-	-	-	-
2012	171	26	62	53	27	3	-	-	-	-	-	-	-	-	-	-
2013	140	27	39	48	23	3	1	-	-	1	-	-	-	-	-	-
2014	174	29	49	75	20	1	1	-	-	1	-	-	-	-	-	-
2015	182	37	55	52	34	4	83	-	68	11	4	3	-	1	2	-
2016	202	31	7	63	75	26	28	-	19	5	4	8	2	1	4	1
2017	273	44	99	89	34	7	48	3	32	8	5	2	1	-	1	-

자치구별 현황 2017

(단위 : 건)

자치구명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결결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273	44	99	89	34	7	48	3	32	8	5	2	1	-	1	-
종로구	8	1	4	1	1	1	5	1	3	1	-	-	-	-	-	-
중구	9	-	3	4	2	-	6	-	6	-	-	-	-	-	-	-
용산구	8	4	3	-	1	-	1	-	-	1	-	-	-	-	-	-
성동구	5	-	3	1	1	-	-	-	-	-	-	-	-	-	-	-
광진구	5	1	2	1	-	1	-	-	-	-	-	-	-	-	-	-
동대문구	9	1	2	6	-	-	-	-	-	-	-	-	-	-	-	-

자치구명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승				
	신청 건수	처리 결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중랑구	7	1	3	2	1	-	-	-	-	-	-	-	-	-	-	-
성북구	7	2	2	1	1	1	-	-	-	-	-	-	-	-	-	-
강북구	6	2	3	1	-	-	-	-	-	-	-	-	-	-	-	-
도봉구	8	1	1	2	4	-	-	-	-	-	-	-	-	-	-	-
노원구	10	6	-	3	1	-	-	-	-	-	-	-	-	-	-	-
은평구	16	-	8	4	3	1	-	-	-	-	-	-	-	-	-	-
서대문구	8	1	1	6	-	-	-	-	-	-	-	-	-	-	-	-
마포구	35	1	27	6	1	-	-	-	-	-	-	-	-	-	-	-
양천구	13	1	3	7	2	-	5	-	4	1	-	-	-	-	-	-
강서구	6	2	-	3	1	-	8	-	5	-	3	-	-	-	-	-
구로구	6	2	1	3	-	-	-	-	-	-	-	-	-	-	-	-
금천구	12	1	2	5	4	-	-	-	-	-	-	-	-	-	-	-
영등포구	9	2	-	6	1	-	1	-	1	-	-	-	-	-	-	-
동작구	11	3	5	2	-	1	1	1	-	-	-	-	-	-	-	-
관악구	11	1	6	2	1	1	4	-	3	1	-	1	-	-	1	-
서초구	16	2	8	5	1	-	-	-	-	-	-	-	-	-	-	-
강남구	19	2	3	8	6	-	-	-	-	-	-	-	-	-	-	-
송파구	18	4	6	5	2	1	7	1	5	1	-	1	1	-	-	-
강동구	11	3	3	5	-	-	10	-	5	3	2	-	-	-	-	-

연도별 현황 2010-2017

(단위 : 건)

구분	개최횟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	부존재 등 기타
2010	8	-	8	13	13	-	-	3(23.1%)	3(23.1%)	7(53.8%)	-	-
2011	13	-	13	17	17	-	-	1(5.9%)	5(29.4%)	10(53.8%)	1(5.9%)	-
2012	16	12	4	40	19	21	-	11(27.5%)	18(45%)	9(22.5%)	-	2(5%)
2013	17	17	-	67	19	45	3	7(10.4%)	19(28.4%)	40(59.7%)	-	2(5%)
2014	19	19	-	84	33	50	1	9(10.7%)	25(29.8%)	43(51.2%)	1(1.2%)	6(7.1%)
2015	16	16	-	70	39	30	1	10(14.3%)	29(41.4%)	25(35.7%)	3(4.3%)	3(4.3%)
2016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2(3.6%)	3(5.5%)
2017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	2(3.3%)

심의내역 2017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	2017.1.6	【제3자 이의신청】 소청심사 대응문서 중 시민인 권보호관 결정문, 시정권고 사례집 발췌본, 사건당일 결재내역	【공개 : 기각】 • 대상 자료는 청구인이 이미 공개된 사항 또는 청구인이 기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비공개 의 실익이 없거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특히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및 사건당일 결 재내역의 공개는 당시 결정이 완료된 사항 또 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일 뿐, 결정효력의 갱신 또는 변경 등 효력 자체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사담당관
1	2017.1.6	【제3자 이의신청】 OO택시(주)의 차량면허 대수 (양도·양수 전·후)	【공개 : 기각】 • 택시회사가 보유한 차량면허대수는 업체의 기 본적인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시물류과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2	2017.2.20	【이의신청】 00구 보건소장의 출장여비 부 정수령에 대해 민원감사를 실 시한 결과보고서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요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경력 등 공 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조사결과 중 '보건소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부분은 주변인 등의 진술내용, 최종처분 확정 전 중간검토결과에 해당하는 조사자 의견, 당 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비공개 • 조사결과 중 '출장비 부당수령금 환수시 가산 금 미부과' 부분, 조치 계획 등 그 밖에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공개 	조사담당관
3	2017.3.17	【이의신청】 2011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 회 참석위원 명단	【비공개 - 제1호 :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명단이 공개된 위원을 대상으로 폭언, 협 박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 제한 및 나아가 위원활동의 기 피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상당한 지장 이 초래되고 있으며, •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이미 위원의 전체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심의 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석위원 명단'은 비공개 • 다만 해당 회차의 위원 전체명단이 청구인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 권고 	도시계획과
3	2017.3.17	【이의신청】 2011~2014년 주한미군 지방 세 감면액수	【공개 :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특정 징수대상 그룹의 감면액에 대한 통계치로서, 공개 시 개별 납세자의 비 밀을 침해하거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초 래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 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세제과
3	2017.3.17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은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원본	【공개 :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개해왔던 정보로서, 지금까지 해당 정 보 공개 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향후에도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조직담당관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4	2017.3.30	【이의신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간제안서, 서울시 대안 요약서, 기타 사업추진 계획 내 세부내용	【비공개 - 제5호 및 제7호 : 기각】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입찰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추진방식, 통행료, 총사업비, 총투자비, 사업수익률, 지하화 추진방안 비교표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안업체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로계획과
5	2017.4.26	【이의신청】 도봉구 소재 성대아구장 부지 개발 관련 '13.4월 당시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공문	【공개 : 인용】 • 요청 정보는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 시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 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공개발센터
5	2017.4.26	【제3자 이의신청】 00운수주에 대한 월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자수, 차량번호, 성명, 근무일수, 유류충전현황, 유가보조금액, 서명	【공개 : 기각】 • 보조금 지급내역(각 차량에 대한 월별 유류충전량, 유가보조금 지급금액, 차량번호)은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정보로,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그 외 월별 지급자수, 성명, 근무일수, 회사분/운전자분별 유류충전현황 및 충전단가, 서명 등의 정보는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택시물류과
6	2017.5.17	【이의신청】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단체와 맺은 단체협약내용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단체협약전문, 단체협약합의서 중 단체협약 개정사항 공개 • 단체협약합의서 중 기타합의사항 및 임금합의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생활환경과
6	2017.5.17	【제3자 이의신청】 2016-0000호 사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행정심판 재결서	【공개 : 기각】 •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은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법무담당관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6	2017.5.17	【이의신청】 '16년 GRDP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10년~'14년 자치구별, 항목별 GRDP 시산데이터	【비공개 - 제1호, 제5호 :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DP 사업 결과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빠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함 시산데이터는 '통계법 제27조의2'에 의해서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 	통계데이터 담당관
7	2017.5.24	【이의신청】 특정 공무원의 인사기록요약서 중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임용 및 근무경력 등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출직 공무원의 학력은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그 밖에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각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7	2017.5.24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위해 시가 검토·검증한 자료	【비공개 - 제5호, 제8호 :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각 기관의 중간단계의 검토의견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관리과
7	2017.5.24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양천구청 열람공고 회신공문 및 양천구보건소 공문		도시관리과
7	2017.5.24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용도변경 보류 사유 등		도시관리과
8	2017.6.12	【이의신청】 '2016년 민간위탁 ○○ 정산서류 제출' 결재문서	【공개 :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이 기 열람 또는 보유한 자료로 비공개 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8	2017.6.12	【이의신청】 '○○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 계획서 승인' 결재문서		지역공동체 담당관

차수	일자	심의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8	2017.6.12	【이의신청】 '○○ 운영관련 자료제출 요청', '○○ 운영관련 외부 법률 자문 의뢰', '○○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재의뢰'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 기각】 • 해당 정보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8	2017.6.12	【이의신청】 '○○ 현장지도 · 점검 안내' 결재문서	【공개 : 인용】 • 해당 정보는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8	2017.6.12	【이의신청】 '○○ 회계지도 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 결재문서	【공개 : 인용】 • 청구인이 기 열람 또는 보유한 자료로 비공개 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8	2017.6.12	【이의신청】 '법률자문 의뢰요청(○○ 잠정 폐쇄 가능여부)' 결재문서	【공개 : 인용】 • 내부검토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8	2017.6.12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 요청한 공문	【공개 : 인용】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나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시관리과
8	2017.6.12	【이의신청】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 보고 결과'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 기각】 • 서울역 일대 지역에 대한 미확정된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관리과
8	2017.6.12	【이의신청】 '재단법인 ○○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 보고(○○)' 결재문서	【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 공문은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보고'의 본문 · 정관변경검토의견서(붙임1) · 정관변경허가서(붙임2)는 계좌번호, 부동산 세부지번 등 경영 · 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신청구비서류(붙임3)는 개인정보 및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자문 회신결과(붙임4)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복지정책과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9	2017.7.6	【직권심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업체명, 사용년도, 업종,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	【공개 : 인용】 • 요청 정보는 법인 등의 일반적인 경영상 정보로서, 비공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녹색에너지과
9	2017.7.6	【직권심의】 '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보류】 • 심의자료를 보강하여 추후 재심의	수집연구과
9	2017.7.6	【직권심의】 서울시 공원 전체의 안전등급 평가결과	【공개 : 인용】 • 인근 지역의 안전도 하락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며, • 오히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범죄 예방 및 안전도 개선 등의 공익적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공개	공원녹지정책과
10	2017.7.26	【사전심의】 본인이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실명이 표기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비공개 - 제6호 : 기각】 • 【주문】과 【이유】의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6, 성희롱행위자' 부분이 실명으로 표기된 결정문은 생산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 다만 상단의 【신청인】, 【피신청인】 부분이 실명 표기된 결정문은 존재하나, 공개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권담당관
10	2017.7.26	【이의신청】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공개 : 인용】 •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항철도 직결 관련 타 기관과의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시철도계획부
10	2017.7.26	【이의신청】 '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등 2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조회'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제8호 : 기각】 • 노선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공개할 경우 노선변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향후 노선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식 의견수렴절차 전까지 비공개	버스정책과

차수	일자	심의의안	심의결과	담당부서
10	2017.7.26	【이의신청】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혈액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등이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별 대상자의 성별, 연령은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별, 연령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대상자의 체중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건강증진과
11	2017.8.4	【이의신청】 2013년 제출된 성대야구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제안서	【비공개 - 제5호, 제7호 및 제8호 : 기각】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도시계획 변경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미확정된 내용의 공개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유발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안업체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제안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공개발센터
11	2017.8.4	【이의신청】 2017 더 컬러 런 유치계획 중 근무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시설 사용료·행사 진행계획 등	【공개 : 인용】 • 근무자 인적사항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이므로 공개 • 사용승인 면적, 사용료, 예상인원 등 그 외 정보는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스포츠마케팅과
11	2017.8.4	【이의신청】 특정 2개 업체의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기록 일체	【비공개 - 제7호 : 기각】 • 해당 시스템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자체예산 및 기술력으로 구축·운영 중으로, 수집항목 자체는 운영사의 독창적인 기술사항에 해당하며, • 시스템 내 수록된 정보는 각 운송업체의 차량별 운행정보, 수입정보 등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택시물류과
11	2017.8.4	【이의신청】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 채용 관련 면접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9인의 면접점수 (개인정보 제외)	【공개 : 인용】 • 성명을 제외한 면접점수는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보건의료정책과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1	2017.8.4	【이의신청】 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관련 관리운영계획, 위탁업체의 임금지급명세서, 위수탁계약서, 각 시설별 낙찰율 등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운영계획은 업체의 독창적인 기술, 노하우 및 운영방안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임금지급명세서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요청하고 있으며, 위수탁 운영협약서, 기술 및 가격협약서의 경우 시와 체결한 일반적인 계약내용으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 	자원순환과
12	2017.8.23	【직권심의】 최근 15년간 연합뉴스에 투입된 예산(전재료 및 기타수입 전체 예산, 연도별, 용도별 예산)	【공개 :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연합뉴스사에 지급한 연도별 전재료 금액은 공개 이 외에 별도 지급된 기타수입 또는 용도별로 구분된 예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연론담당관
12	2017.8.23	【직권심의】 서울 내 모든 개인, 법인 택시 현황(개인택시 택시번호, 법인 택시 택시번호, 법인명, 법인연락처)	【공개 :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시 차량번호, 법인명 및 법인연락처 등 택시 현황정보는 공개시 개인 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시물류과
12	2017.8.23	【이의신청】 OO택시(주) 소속 전체 택시 차량번호(일반택시, 외국인관광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심야택시 등)		택시물류과
13	2017.9.4	【이의신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중 특정 업체의 직원 입·퇴사 현황	【비공개 - 제6호 :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입·퇴사 현황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재생협력과
13	2017.9.4	【제3자 이의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 결재문서	【공개 :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시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되거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버스정책과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3	2017.9.4	【이의신청】 2015년 시내버스 평가결과 중 00자동차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 : 인용】 • 기 공개한 바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에 발생하는 침익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대중 교통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개 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개	버스정책과
13	2017.9.4	【저작권심의】 '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 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공개 : 인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하므로 공개	수집연구과
14	2017.10.16	【저작권심의】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서강대학교 국제 학사(종합) 결재문서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정보로 관계자 및 점검자 성명, 연락처, 전문인력 자격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마포소방서 예방과
14	2017.10.16	【저작권심의】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 '서강대학교' 결재문서		
14	2017.10.16	【저작권심의】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확인서 (홍익대학교 제2기숙사)' 결재 문서		
14	2017.10.16	【이의신청】 ○○ 갈등조정 관련 회의록 및 법적 기록물	【비공개 - 제5호 : 기각】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갈등조정 담당관
14	2017.10.16	【이의신청】 이동식발전기 입찰 관련 시험 기관, 시험샘플 설정기준 및 시행방법, 시험항목 및 성적서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공공기관에서 구입한 제품이 적정규격을 갖추 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험자· 확인자 성명, 서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안전지원과
15	2017.10.26	【이의신청】 소방공무원 채용 등 시험을 위한 소방 전형업무 매뉴얼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시험개요, 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최종합 격자 공고, 전형업무 행정심판 사례는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공고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개 • 그 외 정보는 시험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5	2017.10.26	【이의신청】 서울로 7017 안전유지 위탁 업체 근무일지 중 “출입자, 노점상, 잡상인, 노숙인 통제 여부” 관련 부분 일체	【비공개 - 제6호, 제7호 : 기각】 • 위탁업체 근무자의 개인정보 및 업체의 인력 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업 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으므로 비공개	서울로 운영단
15	2017.10.26	【사전심의】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	【원안의결】 •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을 원안 의결함	정보공개 정책과
15	2017.10.26	【이의신청】 특정 공무원 보직경로, 근무기간	【비공개 - 제6호 : 기각】 •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공개시 당사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16	2017.11.10	【이의신청】 00운수 임원의 개인별 임금	【비공개 - 제6호 : 기각】 • 요청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 식별정보 제외시에도 개인을 추정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버스정책과
16	2017.11.10	【제3자 이의신청】 이동식발전기 입찰 관련 시험 기관, 시험샘플 설정기준 및 시행방법, 시험항목 및 성적서	【부분공개 - 제6호 : 기각】 •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성능시험의 시험기준, 절차, 방법 등이 해당 업체만의 특별 한 노하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요청 정보는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서 공개의 실익이 크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안전지원과
16	2017.11.10	【이의신청】 특정인의 정보시스템담당관 으로 근무한 기간, 서울시 입사 연도, 서울시에서의 주요 근무 이력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대상자의 서울시 재직사실 및 당시 직위 등 이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사항 인 서울시 근무기간, 입사연도는 공개 • 다만 시에서의 주요 근무이력은 개인의 경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17	2017.12.4	【이의신청】 노원자원회수시설 일상감사 의뢰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연차별 위탁비용), 원가 계산서	【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기각】 • 현재 위탁자 선정 과정 중에 있어 공개시 적 격자 심사 및 계약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원순환과

차수	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7	2017.12.4	【이의신청】 2017년 10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지출금액,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붙임서류 등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법인의 은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사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민간위탁금 지출금액 및 청구서류(계좌 정보 제외)는 공개	자원순환과
18	2017.12.18	【직권심의】 2016년 환자안전사건 분석 결과 보고	【보류】 • 가·부 등수로 결정 보류	서북병원 간호부
18	2017.12.18	【직권심의】 고장유형분석(FMEA) 결과 보고	【비공개 - 제5호 : 기각】 • 잠재적 오류유형별 구체적 회의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오류유형 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구성원의 '자율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개시 자율보고의 기피 등으로 안전사건 예방 및 개선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서북병원 간호부
18	2017.12.18	【직권심의】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5과목) 문항별 정답률	【공개 : 인용】 • 매 시험마다 문제 난이도, 문항별 정답률 등 제반여건이 달라지고, 출제문제 및 정답이 이미 공개되고 있어 요청정보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인재채용과

2017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Tel. 02-2133-5679

발행인 행정국장 황인식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주무관 원기철

디자인 디자인세륜 02) 2273-5167

관련기관(부서)연락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02-2133-5678-81, 5697

서울특별시 열린민원실 02-2133-790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2-2100-3425, 3427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1588-2572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947-10

ISBN 979-11-6161-429-8

©서울특별시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2017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투명한 정보공개
믿을 수 있는 시정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

비매품/무료



9 791161 614298

13350

ISBN 979-11-6161-429-8